행복세상 2016 제2회 국가발전 정책토론회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 논쟁
-기회의 수저는 없나?



일 시 2016년 6월 24일(금) 13:30~18:00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국민대통합위원회, 재단법인 행복세상

재단법인 행복세상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 논쟁
-기회의 수저는 없나?

재단법인
행복세상

프/로/그/램

13:30~14:00	개회	개회사 김성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환영사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14:00~16:10	주제 발표	기조발제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 문제와 계층갈등 : 현실과 대안**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과제**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2 **계층갈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3 **노동시장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4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 인식, 현황, 그리고 과제**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6:10~16:30	휴식	
16:30~17:10	지정토의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 사회통합실장)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진경호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17:10~17:30	종합토의	발제자 및 토론자 전체
17:30~17:50	질의 응답	청중
17:50~18:00	폐회	기념촬영 및 정리

Contents

기조발제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 문제와 계층갈등 : 현실과 대안**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05

발제1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과제**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5

발제2 **계층갈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35

발제3 **노동시장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49

발제4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 인식, 현황, 그리고 과제**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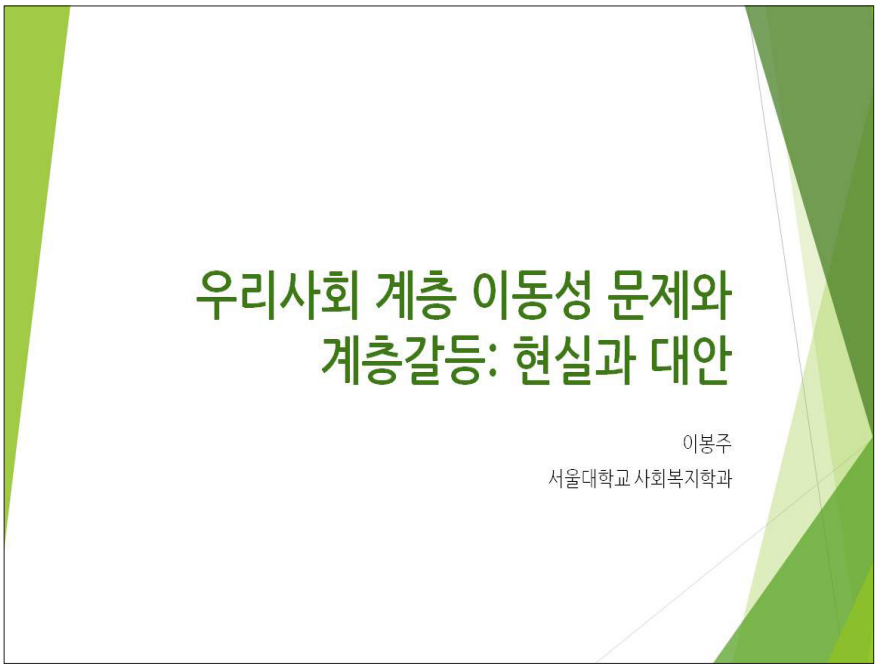
종합토론문 ····· 99

기조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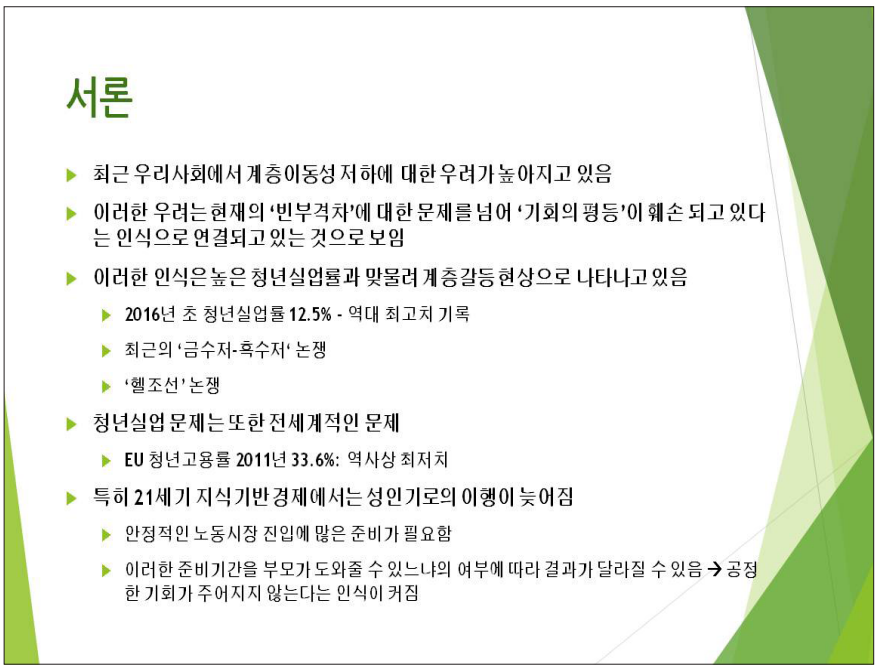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 문제와 계층갈등 : 현실과 대안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사회 계층 이동성 문제와
계층갈등: 현실과 대안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 >


서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계층이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우려는 현재의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넘어 '기회의 평등'이 훼손 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인식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맞물려 계층갈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6년 초 청년실업률 12.5% - 역대 최고치 기록
최근의 '금수저-흑수저' 논쟁
'헬조선' 논쟁
청년실업 문제는 또한 전세계적인 문제
EU 청년고용률 2011년 33.6%: 역사상 최저치
특히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짐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많은 준비가 필요함
이러한 준비기간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짐

< 2 >

- 하지만 최근의 실증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사회이동성은 국제비교 차원에서는 아직도 높은 편이라는 결론
-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 더 이상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 소득 5분위 계층과 1분위 계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의 심화: 2016년 1분기, 약 9배 (통계청)
  - 1990년대는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고등 교육을 받은 세대의 소득에 대해 아버지의 소득 영향력이 상당히 낮았음 --> 높은 사회이동성
  - 2000년대 들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계층 간 교육격차가 커지면서 교육은 더 이상 계층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
- 계층이동성과 기회의 평등의 문제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교육수준, 직업, 소득) → 자녀의 발달(학업성적, 인적자본) → 미래 자녀의 소득

< 3 >

- 기회의 평등이 제한된 사회 →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 →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부러져 계층이동이 어려운 사회 → 중간층이 얇은 양극화된 사회 → 희망이 없는 사회 → 건강하지 않은 사회
- 이 발제에서는 계층이동과 기회의 평등의 문제를 '빈곤의 대물림' 이라는 관점에서 고찰
- 빈곤(혹은 부모의 소득)이 청소년과 청년의 발달(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 성인기로의 이행 시기인 초기 청년기에서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에 주목
  - 청소년기 발달에 빈곤이 미치는 영향 분석
- 실증 분석을 토대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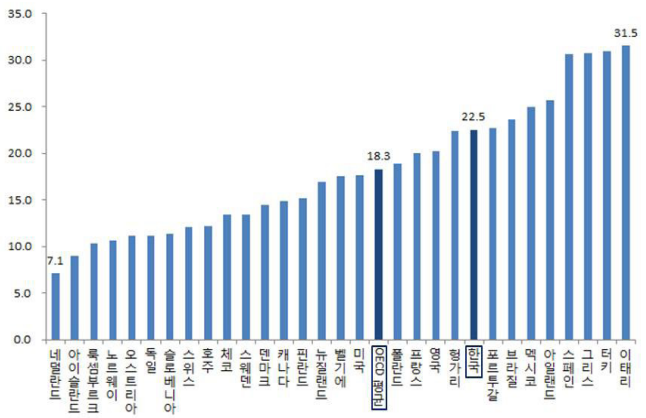
< 4 >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 NEET는 2010년 이후 유럽이사회에서 주목하는 문제로 부상
- NEET 증가는 인적자본의 지체, 청년의 미래 고용가능성과 생애소득에 부정적 결과 야기
-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전후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주목하는 것은, 장기빈곤 위험을 감소시키고 빈곤의 대물림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

< 5 >

NEET: OECD 비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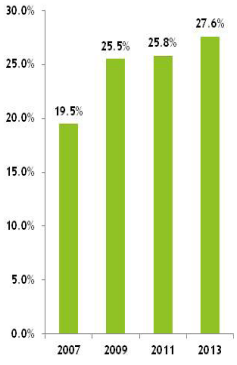
< 6 >

한국의 NEET(19-24세) 현황: 청년패널 자료 분석 결과



< 7 >

빈곤층의 NEET 비율과 계층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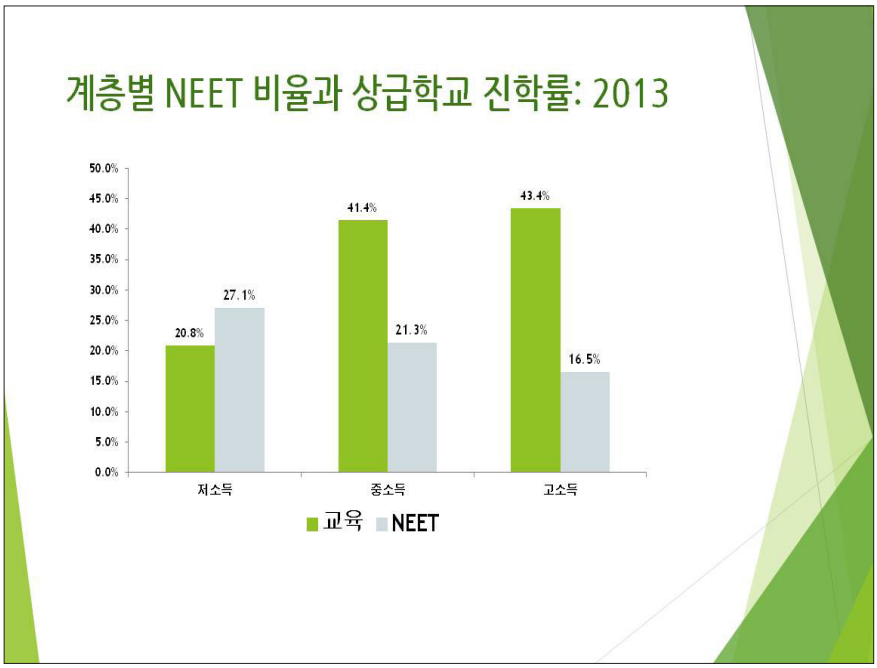


〈빈곤층의 NEET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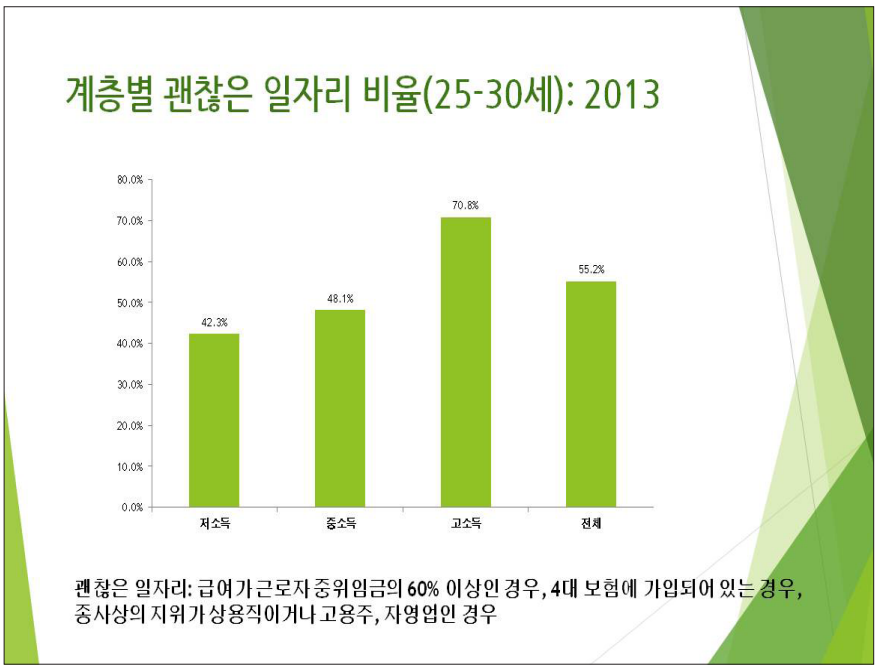


〈계층간 NEET비율 격차〉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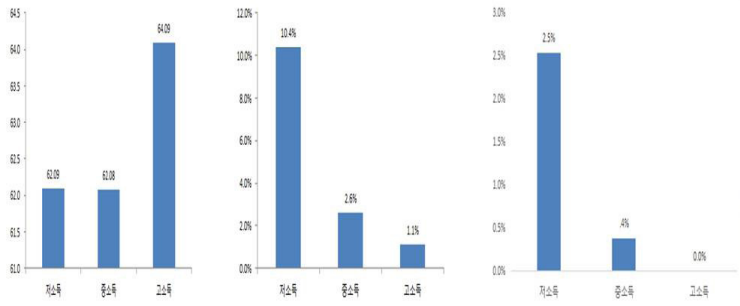

계층별 NEET 비율과 상급학교 진학률: 2013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20.8%
27.1%
41.4%
21.3%
43.4%
16.5%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교육
NEET

< 9 >


계층별 괜찮은 일자리 비율(25-30세): 2013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42.3%
48.1%
70.8%
55.2%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전체
괜찮은 일자리: 급여가 근로자 중위임금의 60% 이상인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이거나 고용주, 자영업인 경우

< 10 >

그렇다면 청소년기인 13-18세의 현황은 어떤가?
: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진로성숙도 진로계획 없음 학업중단의사

< 11 >

결론은?

NEET의 영향요인: 청년패널 분석 결과

변수	B	S.E.	Wals
소득(저소득)			7.074
중소득	.098	.295	.112
고소득	-.381	.167	5.184
진로계획여부(있음)	.465	.259	3.228
학교만족(만족)			5.227
학교만족(보통)	.081	.287	.080
학교만족(불만족)	.355	.156	5.183
성적(하위권)			2.509
성적(중위권)	-.314	.210	2.232
성적(상위권)	-.147	.212	.483

< 12 >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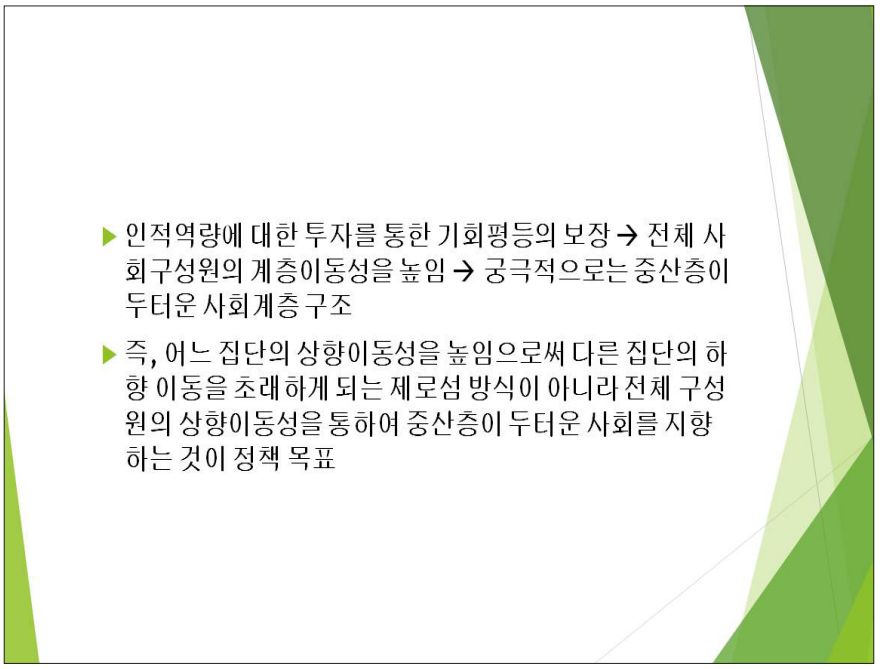
- 부모의 경제력(가구소득) → 청소년기의 발달 격차 → 성인 이행기의 NEET 문제 → 청년기의 일자리의 질 → 자식 세대의 소득
- 계층이동 가능성의 저하
- 빈곤의 대물림 현상 심화

< 13 >

결론을 대신해서: 정책 대안을 찾아

-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 →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 →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 → 지속가능한 통합된 사회
-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 →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에의 투자 → 자식세대의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 형성 → 낮은 생산력 → 빈곤의 대물림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개별 가정에 계만 맡겨 놓은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 사회의 인적자본의 총체적인 수준이 낮아짐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어리면 어릴수록, 예방적일수록 그 효과가 높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인적자본개발형 정책의 확대가 필요
- 인적자본 증진 복지정책은 소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인적역량 개발에의 투자를 통하여 기회의 평등을 제고할 필요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 14 >


인적역량에 대한 투자를 통한 기회평등의 보장 → 전체 사회구성원의 계층이동성을 높임 →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계층 구조
즉, 어느 집단의 상향이동성을 높임으로써 다른 집단의 하향 이동을 초래하게 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상향이동성을 통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정책 목표

< 15 >

발제1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과제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계층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과제

한 준
(연세대 사회학)

< 1 >

사회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2 >

사회이동

- 세대내 이동: 일자리 및 경력, 소득이동
- 세대간 이동: 교육과 계층이동, 소득이동

< 3 >

세대간 사회이동에 대한 접근

- 경제학: 세대간 소득 이동성(1-소득탄력성)
  부모/자녀간 소득 회귀계수
- 사회학: 세대간 지위(직업계층) 이동성
  부모/자녀 교차표(1-주대각선 비율)

< 4 >

세대간 사회이동의 의미

- 낮은 소득탄력성, 높은 계층이동성은 보다 많은 기회의 존재 및 기회에 대한 접근의 개방을 의미
- 구조적 이동: 기회의 양적 팽창 혹은 축소
  (절대적 이동률)→ 활력과 낙관적 전망
- 순환적 이동: 기회 접근의 개방 혹은 폐쇄
  (상대적 이동률)→ 공정성과 신뢰

< 5 >

세대간 이동의 체제 비교

- 후원 받은 이동(sponsored mobility) 영국
- 경쟁을 통한 이동(contest mobility) 미국
  - R. Turner(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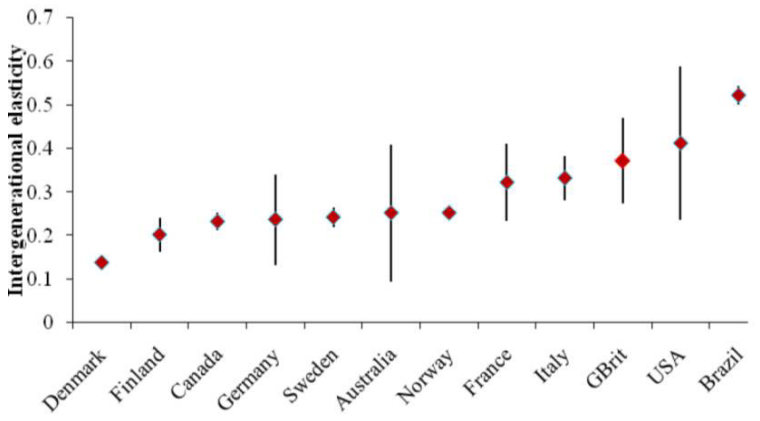
⟹ 한국은 어떤 체제에 가까운가?

< 6 >

사회이동은 얼마나 활발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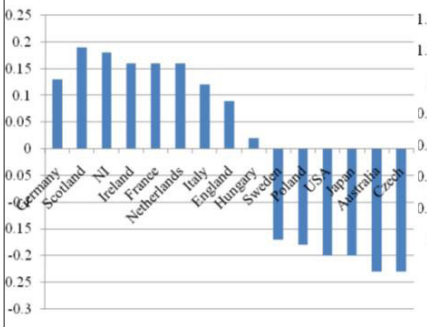
< 7 >

세대간 소득탄력성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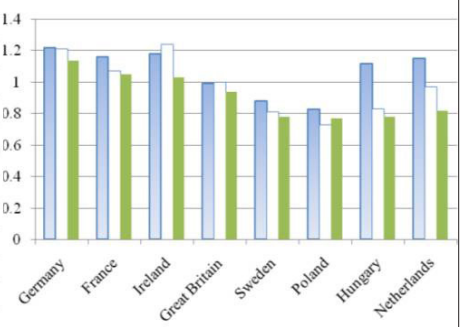


< 8 >

세대간 계층이동의 폐쇄와 개방(상대율)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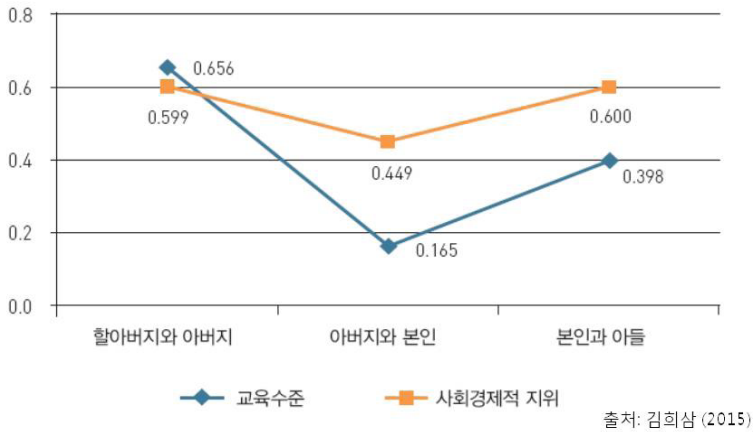
출처: Erickson & Goldthorpe (1992)



출처: Breen (2004)

<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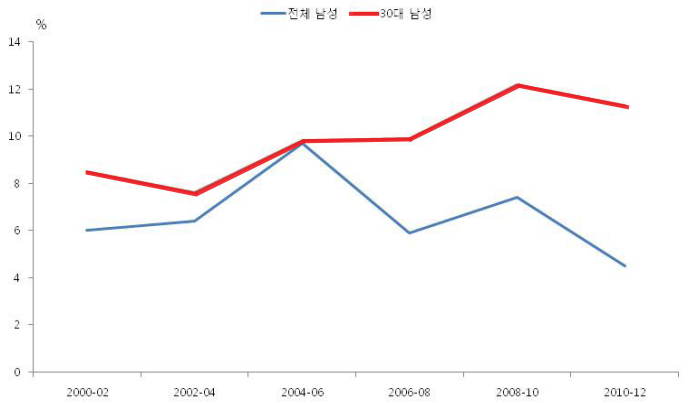
세대간 상관계수 추이: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



출처: 김희삼 (2015)

< 10 >

소득불평등의 노력/환경 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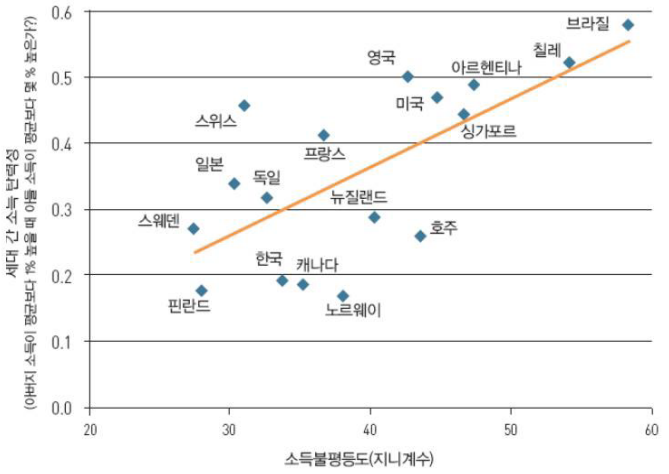
출처: 신우진 외 (2015)

< 11 >

불평등과 사회이동

<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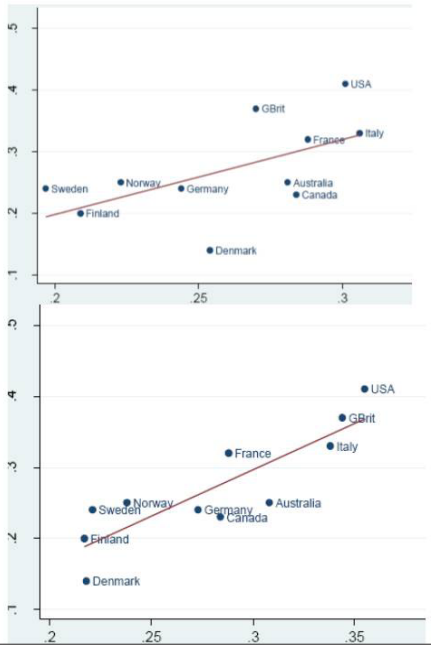
소득불평등과 소득탄력성 국제비교
Great Gatsby Curve



출처: 김희삼(2015)

<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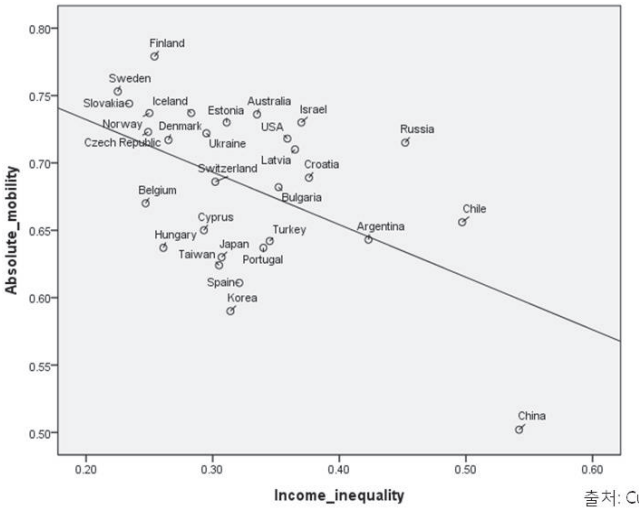
Great Gatsby Curve 변화: 1980 vs 95



출처: Blanden(2013)

< 14 >

소득불평등과 계층이동(절대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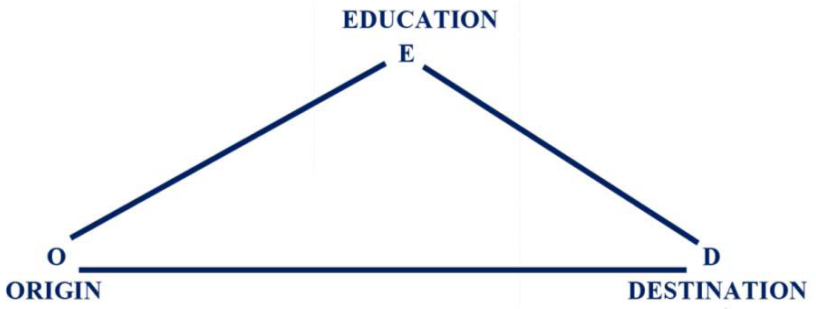
출처: Curtis(2016)

< 15 >

교육과 사회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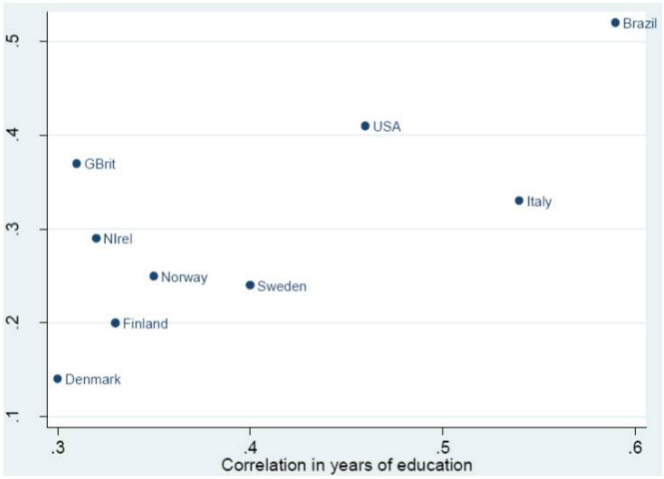
< 16 >

출발점-교육-도착점(OED)의 삼각형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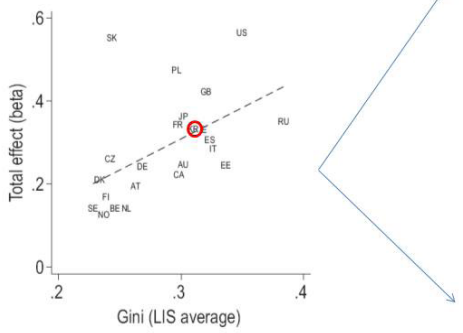
학력 대물림과 소득탄력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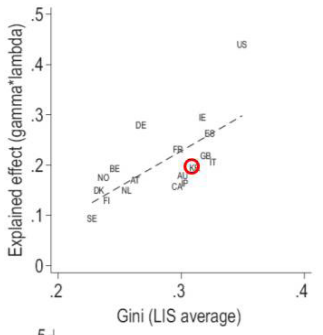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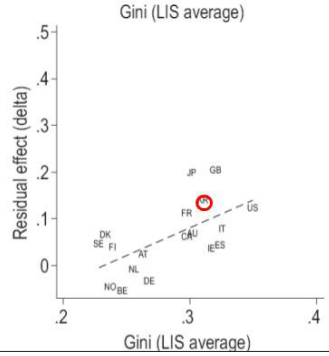
출처: Blanden(2013)

< 18 >

소득불평등과 세대간 소득이동의 관계에 대한 교육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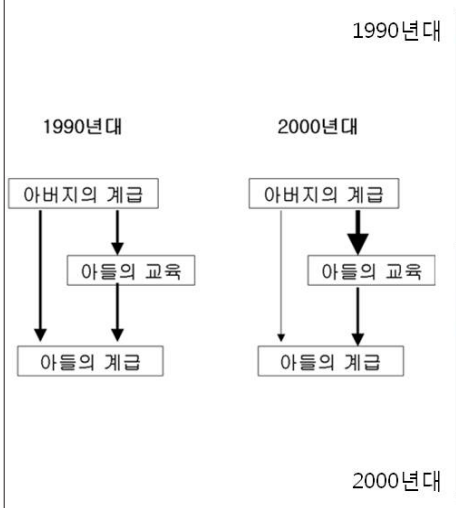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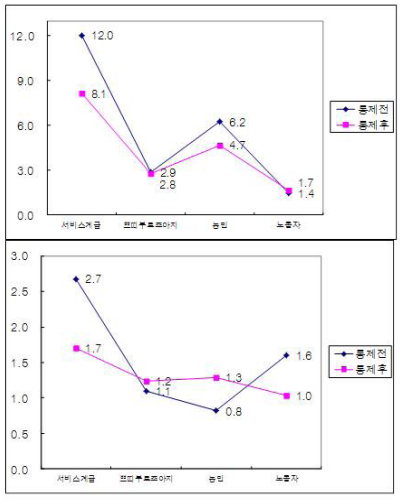


출처: Jerrim & Macmillan (2015)

< 19 >

교육이 계층 세습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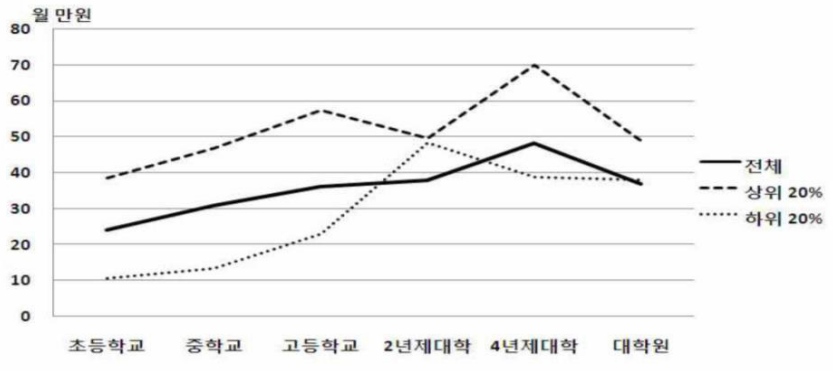




출처: 한 준(2008)

<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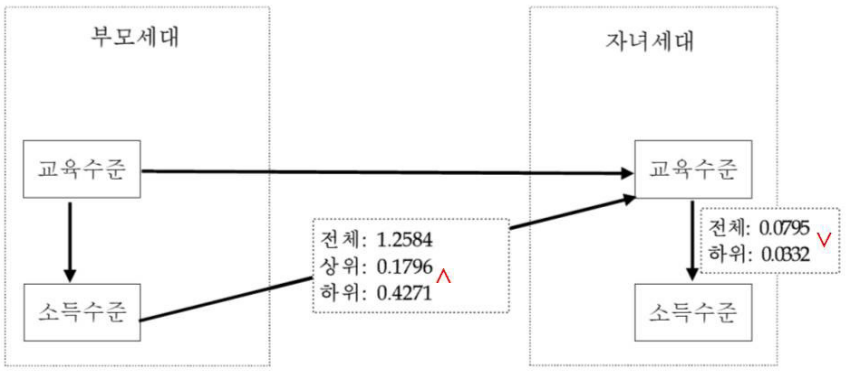
자녀 1인당 교육비 지출의 소득계층간 비교



출처: 최은영(2012)

< 21 >

교육과 소득의 세대간 영향



출처: 최은영(2012)

< 22 >

사회 이동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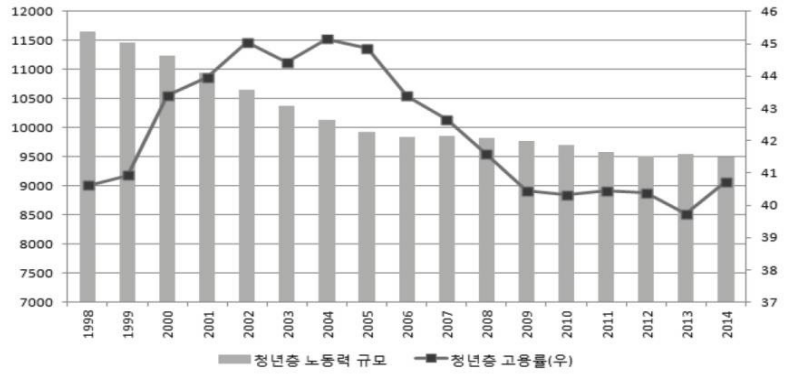
< 23 >

1. 청년 중심 일자리 공급

- 구조적 이동은 기회의 공급에 의존
- 1990년대까지 비교적 높은 이동은 주로 구조적 이동의 결과
- 저성장과 노동절약적 기술발전, 경력자 채용 선호 등으로 일자리 공급 조건 악화
- 제도적 개혁을 통한 일자리 공급으로 구조적 이동기회 제공 필요

< 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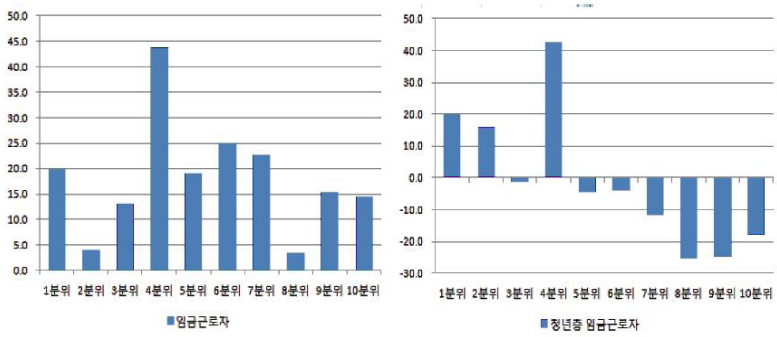
청년층의 노동력과 고용률 추이



출처: 김복순(2015)

< 25 >

일자리 질로 나눈 고용증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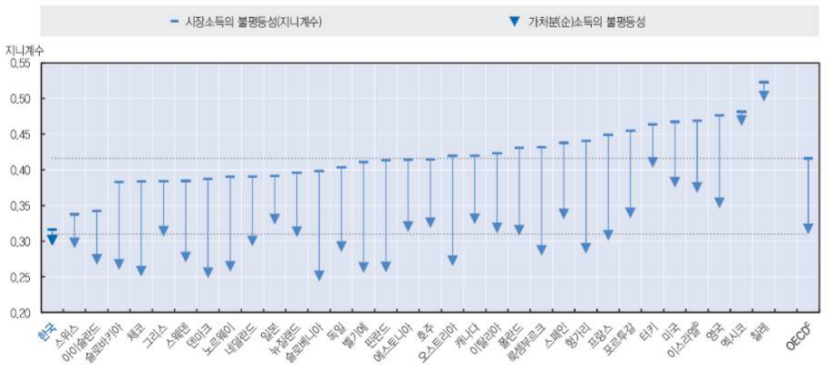
출처: 김복순(2015)

< 26 >

2. 재분배와 복지

- 사회이동은 괜찮은 일자리 진입 못지 않게 빈곤 탈출이 관건
-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제도적 보호 필요
- 현재의 불평등 감소는 미래세대의 출발점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짐
- 빈부간, 기업/가구간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하는 세제 개편 필요

현금이전 및 소득세를 통한 불평등감소 효과(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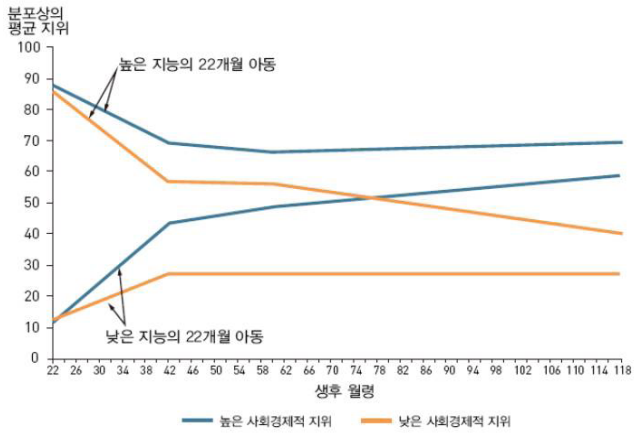
출처: OECD(2013)

3. 세습이 아닌 이동을 위한 교육

- 고등교육은 구조적 이동기회가 많았던 5~60년대생에게 이동의 발판 제공
- 구조적 이동기회 줄고 교육투자 수익 감소 이후 8~90년대생은 차별화 노력 강화
- 사교육 확대와 스펙 경쟁 격화로 교육에서 학습보다 선별 기능 강화
- 능력주의 강화 및 아동기 조기개입으로 교육의 계층세습 효과 차단 필요

<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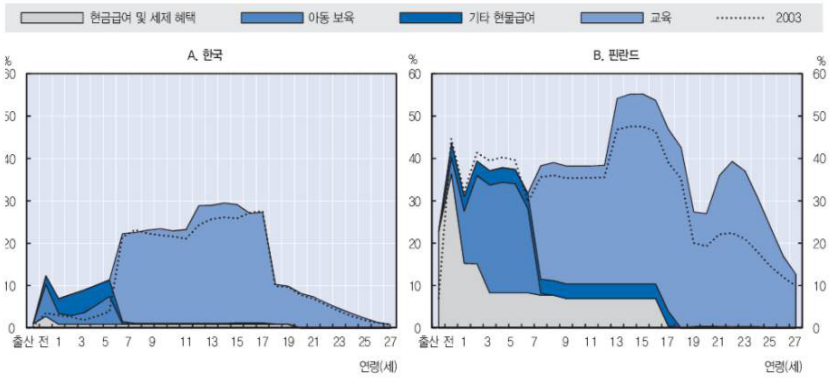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배경과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



출처: 김희삼 (2015) 재인용

< 30 >

정책별 아동 1인당 사회적 지출 비교
(중위근로소득 가구에 대한 비율,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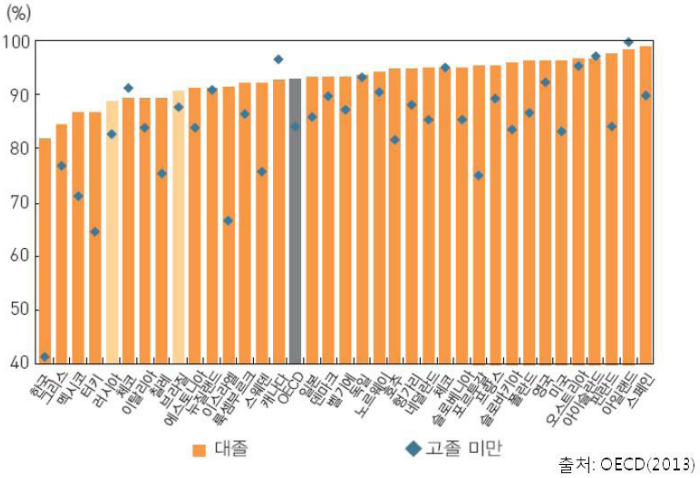


출처: OECD(2013)

4. 사회적 배제와 차별 예방

- 토너먼트식 경쟁과 승자독식적 배분으로 높아진 불확실성 하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남
- 과시적 스펙과 연줄을 통한 특권 확보로 청년층의 공정성, 동기부여, 신뢰 감소
-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및 효과적 차별방지 제도의 실시로 능력 사장과 세습 예방 필요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 차이



출처: OECD(2013)

< 33 >

발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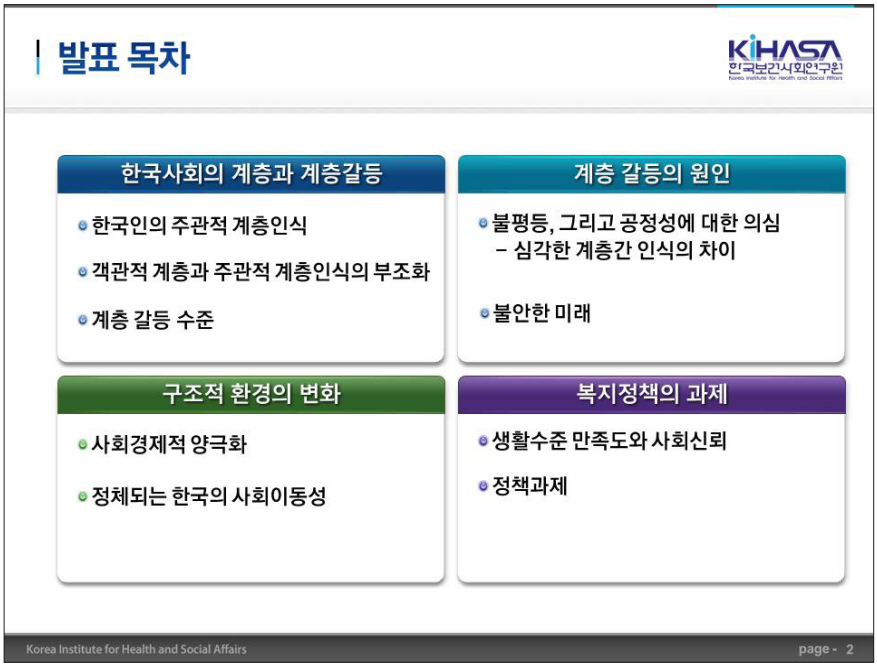
계층갈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층갈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
기초보장연구실 사회통합연구센터 정해식
2016. 06. 24.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 >


발표 목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사회의 계층과 계층갈등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인식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인식의 부조화
계층 갈등 수준
계층 갈등의 원인
불평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
- 심각한 계층간 인식의 차이
불안한 미래
구조적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정체되는 한국의 사회이동성
복지정책의 과제
생활수준 만족도와 사회신뢰
정책과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ge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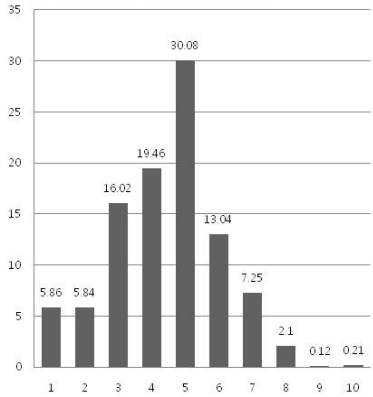
< 2 >

1-1. 한국사회의 계층

사회계층

- 인간 사회에서 개인 및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지칭
  - 재산이나 소유, 성별, 나이 ,종교 등에 의해서도 사회계층화가 일어남
-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
  - 상위층이라 응답하는 이들은 적고, 중간 이하 층이라 응답하는 이들은 많음.
  - 47.19%가 보통 미만을 선택

[그림 1] 한국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 3 >

1-1. 한국사회의 계층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인식의 부조화

- 주관적 계층은 소득, 자산 및 사회적으로 누리는 혜택 등 다차원적 속성이 반영된 결과
  - 사회 계층에서 위계의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아래로 내려갈수록 혜택을 누릴 수 없음.
- 주관적 계층 인식에서 소득 외 차원이 크게 작동 중
  - 가구 총소득 수준과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과의 부조화 발생
  - 특히 중위 소득의 50% 이상~ 200% 미만 집단에서 계층 인식의 부조화 발생

[표 1] 가구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

	1그룹(1,2)	2그룹(3,4)	3그룹(5)	4그룹(6-7)	5그룹(8-10)
중위소득 50% 미만	33.51	44.39	16.67	4.75	0.67
~ 중위소득 100%	13.24	43.87	29.45	12.40	1.05
~ 중위소득 150%	5.65	31.90	35.61	24.46	2.38
~ 중위소득 200%	1.95	23.97	36.06	34.19	3.84
중위소득 200% 초과	1.30	14.29	27.85	46.36	10.20
	11.70	35.49	30.07	20.30	2.44

* 주: 중위소득은 185만원으로 측정되었음.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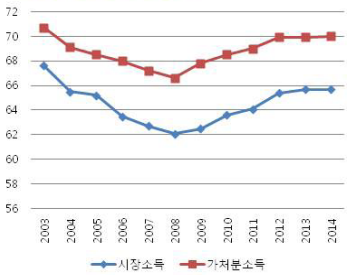
< 4 >

1-1. 한국사회의 계층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인식의 부조화

- 중산층(중위 소득 50~150%)의 규모는 2008년을 저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2014년에는 전년에 이어 65.7%가 이 범위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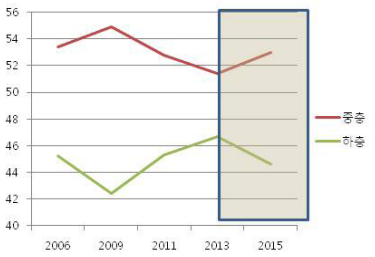
[그림 2] 중산층의 규모 변화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빈곤통계연보 p.59를 활용함.

- 주관적 계층의식의 하락
  - 중간층 비율 감소(2009년 54.9% -> 2013년 51.4%)
  - 하층 비율 증가(2009년 42.4% -> 2013년 46.7%)
  - 2015년 조사에서 추세 전환하였음.

[그림 3] 계층인식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5 >

1-2. 한국사회의 계층 갈등

심각한 계층 갈등

- 계층, 노사, 이념 등 8개 주요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질문
  - 계층 갈등 심각성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계층 갈등은 2010년 조사 이래 항상 가장 심각한 갈등에 해당하였음(보고서, p.60).

[그림 5] 갈등유형별 갈등 '심각성' (%)



*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5), 국민통합 의식조사 보고서, p.59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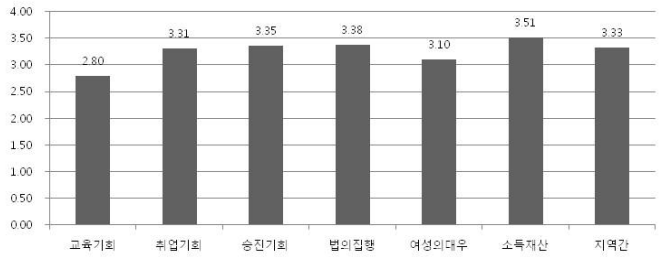
2-1. 계층 갈등의 원인 (1)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불평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

- **한국 사회의 각 요소에 대한 평등인식을 측정한 결과,**
  - 교육 기회의 경우에는 평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소득 · 재산은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그림 6] 영역별 평등 인식



- 주: 매우 평등하다(1) ~ 매우 불평등하다(5).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1. 계층 갈등의 원인 (1)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불평등에 대한 계층간 인식 차이

- **소득 · 재산의 불평등에 있어 계층간 인식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 이 정도 수준은 심각한 불평등, 심각하지 않은 불평등 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갈등의 한 지점: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 **교육, 취업의 기회에서 현재 주관적 계층이 높은 층은 상대적으로 더 평등하다고 생각함**
  - 기회의 평등에 대한 계층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갈등의 한 지점: 노력하지도 않고, 불만만 가득하다.
  - 문제를 '세대'로 확대하면, 갈등의 지점은 보다 복합적(compound) 성격을 가지게 됨.

[그림 2]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불평등 인식

주관적 계층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	법의집행	여성의 대우	소득재산	지역간
1그룹	3.00	3.45	3.49	3.46	3.17	3.75	3.41
2그룹	2.83	3.39	3.39	3.44	3.11	3.59	3.37
3그룹	2.73	3.25	3.32	3.32	3.10	3.43	3.28
4그룹	2.75	3.20	3.28	3.30	3.05	3.38	3.29
5그룹	2.50	3.13	3.31	3.35	3.05	3.41	3.20

- 주: 주관적 계층 인식을 집단별로 구분하였음. 1그룹(1, 2), 2그룹(3, 4), 3그룹(5), 4그룹(6,7), 5그룹(8-10)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1. 계층 갈등의 원인 (1)

세대 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계층간 인식 차이

- **주관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일수록 세대 내 계층이동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음**
  - 주관적 계층이 1그룹(1, 2)인 경우 60%가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 2그룹(3,4)의 경우에는 53.67%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
  - 평균적으로 46.95%가 낮다고 보았음.

[표 3]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세대내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

주관적 계층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1그룹	4.63	30.63	32.19	27.81	4.74
2그룹	2.34	40.14	36.64	17.03	3.85
3그룹	3.82	50.61	31.03	10.71	3.83
4그룹	4.04	56.14	29.7	7.37	2.75
5그룹	9.73	56.31	27.36	5.59	1.02
평균	3.58	45.82	32.8	14.15	3.66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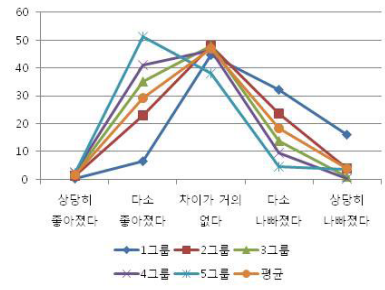
< 9 >

2-1. 계층 갈등의 원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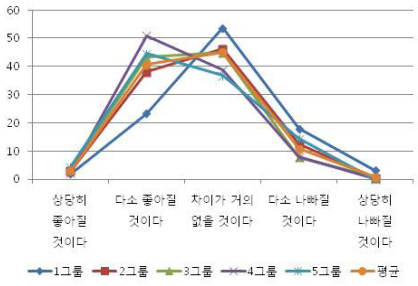
불안한 미래

- **주관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과거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내재화하고 있음**

[그림 7] 지난 10년간 생활수준의 변화 평가



[그림 8] 향후 10년대 생활수준의 변화 예측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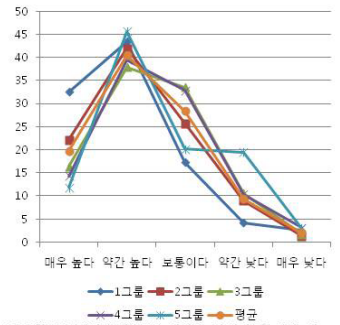
2-1. 계층 갈등의 원인 (2)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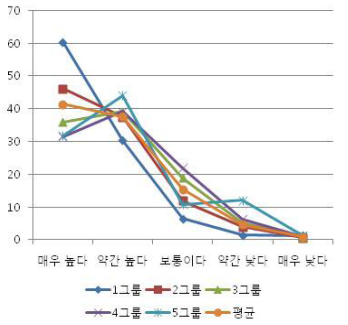
불안한 미래

- 주관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과거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내재화하고 있음

[그림 9]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 빈곤위험성



[그림 10] 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빈곤위험성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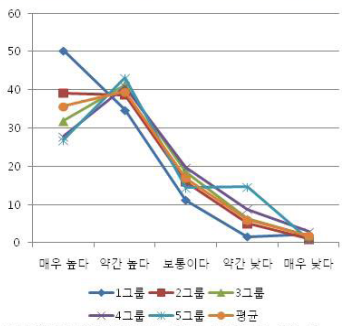
2-1. 계층 갈등의 원인 (2)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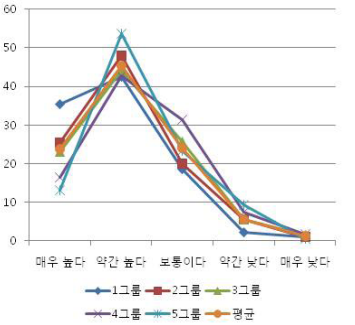
불안한 미래

- 주관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과거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내재화하고 있음

[그림 11] 실직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빈곤위험성



[그림 12] 경제위기 등 경제침체로 인한 빈곤위험성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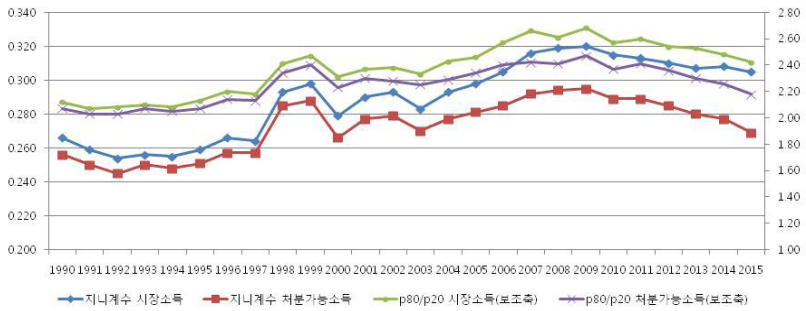
< 12 >

3. 구조적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계층갈등의 구조적 조건이 심화

- 소득분배 지표는 2008~2009년을 정점으로 하여 개선 상황에 있음.
  - 그러나, 분배 지표 개선의 효과가 인식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림 13] 소득 분배 지표의 변화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도시 2인 이상)

< 13 >

3. 구조적 환경의 변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따라 계층갈등의 구조적 조건이 심화

- 비정규직의 비율은 소폭 감소 추세에 있으나, 상대임금 수준은 하락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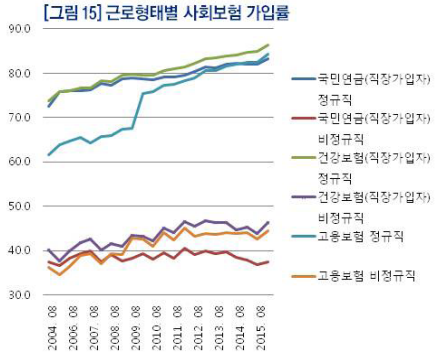
[그림 14] 비정규직의 비율과 상대임금수준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전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

[그림 15]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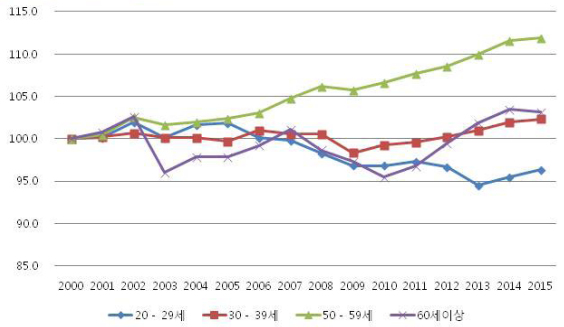
< 14 >

3. 구조적 환경의 변화

세대간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고용률 증가의 상당 부분은 중, 장년 고용의 증가에 기인
  - 청년층(20-29세)의 고용률은 2000년 대비 96.3%로 오히려 감소

[그림 16] 세대별 고용률 변화(2000=10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5 >

3. 구조적 환경의 변화

정체되는 한국의 세대내 소득지위 이동

- 석상훈(2009),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변화요인.
  - 소득분위로 측정한 상대적 소득계층 이동은 낮아지고 있음. 특히, 빈곤층으로의 진입이 탈출보다 높고, 빈곤층에서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음. 낮은 소득계층이동 경향은 고소득 분위에서도 나타나, 소득분위의 양극단에서 동일계층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건범(2009), 한국의 소득이동: 현황과 특징.
  - 이행행렬을 이용한 부동지수(immobility index)를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이동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빠른 속도로 낮아져서 미국의 소득이동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음.
- 강신욱 외(2010), 고용복지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
  - 분위 이동비율은 90-97년 평균 64.3%, 98-02년 평균 62.9%, 03-08년 평균 57.7%로 하락하고 있음.

기간	상승	유지	하락	변동 =상승+하락	2분위 이상 상승	2분위이상 하락	2분위 이상 변동
90-08평균	31.5	38.1	30.3	61.9	12.7	12.8	25.5
90-97평균	33.0	35.7	31.2	64.3	14.0	14.1	28.1
98-02평균	31.7	37.1	31.2	62.9	12.9	12.8	25.7
03-08평균	29.4	42.3	28.3	57.7	10.8	10.8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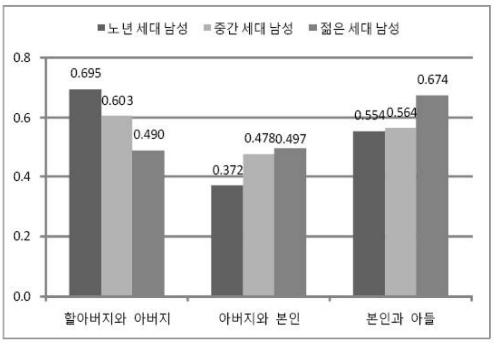
< 16 >

3. 구조적 환경의 변화

세대간 소득지위 이동의 고착화

- 안종범·전승훈(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 부모 세대의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자녀가구의 소득함수에서 부모가구의 경상소득(로그소득)의 영향력은 25.35%.
- 김봉근·석재은·현은주(2012). 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추세.
  - 세대 간 장기임금소득 탄력성이 0.3 근방으로 추정.
- 김희삼(2014:604). 세대간 계층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
  -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상관관계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음.

[그림 13-14] 남성의 연령집단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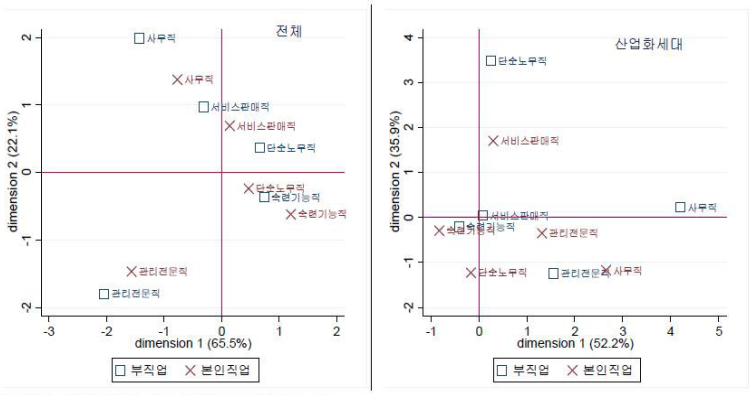


< 17 >

3. 구조적 환경의 변화

세대간 직업지위 이동의 고착화

- 관리전문직의 직업 전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민주화 세대에서 관리전문직 아버지와 아들의 밀착도가 높고, 모수치로부터 상당한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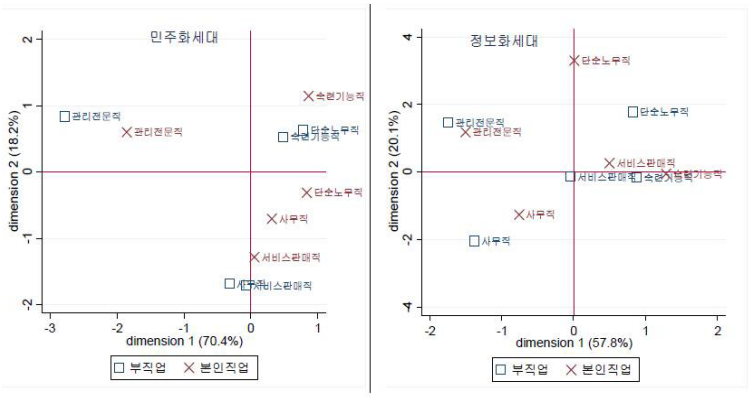
* 자료: 여유진, 정해식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p.57

< 18 >

3. 구조적 환경의 변화

세대간 직업지위 이동의 고착화

– 정보화세대에서 관리전문직 아버지와 아들의 밀착도가 매우 높으며, 모수치로부터 약간 이탈



* 자료: 여유진, 정해식 외(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p.57

4-1.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생활수준 만족도와 사회신뢰

–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이 낮은 집단에서 평균보다 더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로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은 평균보다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수준 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활수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 ~ 매우 만족한다(10)' 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5.65점으로 우리 국민은 보통보다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신뢰 인식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혀 믿을 수 없다(0) ~ 매우 믿을 수 있다(10)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4.73점으로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생활수준 만족도와 사회신뢰 수준

		신뢰수준			전체
		1(0 ~ 4)	2(5)	3(6 ~ 10)	
생활수준 만족도	삶의 만족도(0-4)	58.73	26.26	15.01	100
	삶의 만족도(5)	38.82	41.3	19.87	100
	삶의 만족도(6)	32.02	33.14	34.84	100
	삶의 만족도(7)	25.18	32.31	42.51	100
	삶의 만족도(8-10)	27.46	26.49	46.05	
전체 평균		37.35	33.19	29.46	100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4-2. 정책과제

소득불평등과 사회이동성

- **소득이동성의 감소 기간은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는 과정과 대체로 일치**
  -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사회이동성도 낮아지고 있음.
- **노동시장의 하위 계층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해당 집단의 소득계층을 하향 이동시키는 강력한 요인
  - 노동시장의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 고용의 질에 주목할 필요 있음.
- **1차 분배와 2차 분배 모두에서 개입이 필요**
  -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정책적 개입이 필요
    :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계층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 사각지대 축소 등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을 통한 재기의 기회 제공
    :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 지원 및 자격인정(credit)을 확대하여,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확대.
    : 지원제도는 빈곤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빈곤하기 때문에 일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고용과 복지의 연계)

< 21 >

4-2. 정책과제

직업계층 고착화와 사회이동성

- **계층 상승의 폭발 이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라 사무직, 관리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는 경과
  - 우리사회는 제한된 상위직업 계층을 놓고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
- **종사상 지위의 결정에 가정형편 등 사회적 배경이 작동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음.**
  - 박병영 외(2011:18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으로, 최근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확인
  - 최근 세대는 노동시장의 지위 결정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
  - 특히, 저학년 시기의 교육 지원이 필요
    : 취약계층의 학업성취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자본의 습득을 지원해야 함
    : 문화자본, 학업성취 동기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드림스타트 사업의 확대 필요
: 빈곤아동에 대한 선제적 사회투자

< 22 >


감사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제3

노동시장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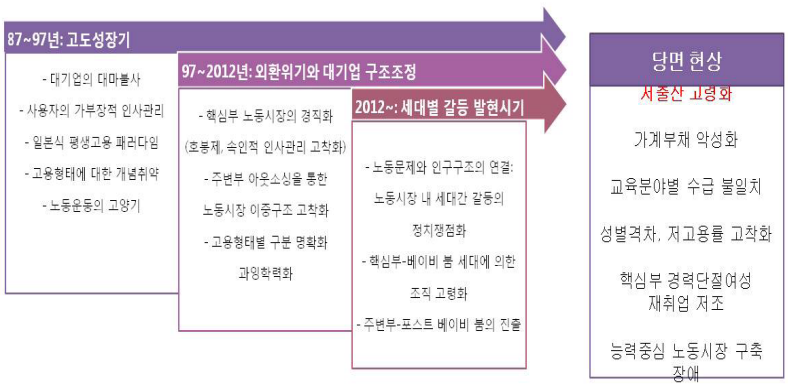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

노동시장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과제

< 1 >

1. 1) 한국 노동시장의 당면 현상과 근인
1. 시대별 개관과 당면 현상



< 2 >

1. 1) 한국 노동시장의 당면 현상과 근인
2. 현상의 근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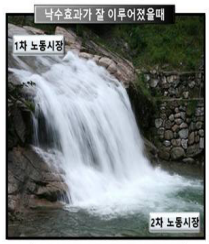


유동성이 자유롭지 못한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 핵심부(이하 1차) 노동시장: 대기업·정규직, 고임금 과보호
- 주변부(이하 2차) 노동시장: 중소기업·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 격차 확대

- 대기업 생산물/노동 공급독점 담합적 노사관계
- 중소기업 비정규직 · 자영업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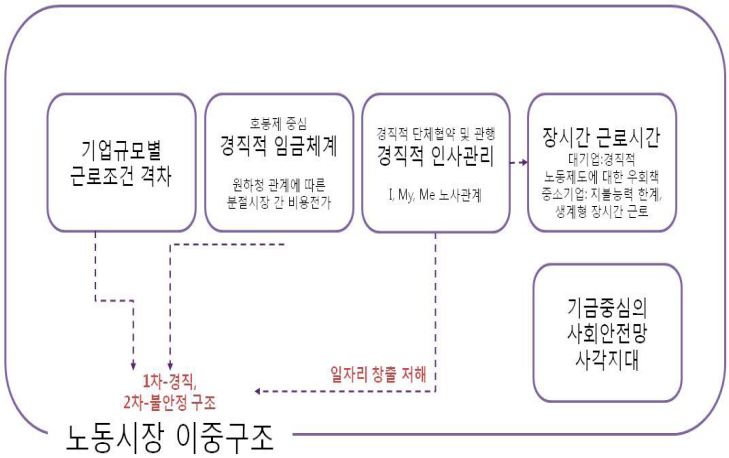




그림출처: http://blog.naver.com/yell33/30148826404의 자료를 편집함

< 3 >

1. 1) 한국 노동시장의 당면 현상과 근인
2. 현상의 근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 4 >

1. 2) 기존 노동 개혁의 문제점
1. 노동개혁에 대한 가치프레임

- 노동개혁의 프레임 대국민 설득 실패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이중구조 개혁 등 프레임이 다분히 학술적인 개념으로 지하철에 붙은 노동계의 쉬운 해고 프레임에 밀렸음
  -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 부족했음
    - 예) 노사정위 세대상생위(2012): 60세 정년 입법 전후에 장년/정년의 일자리 대체 및 보완 여부에만 집중
  - 골프경기로 평가하면, 노동개혁의 Driver는 장거리로 때렸지만, 개혁을 완수하는 Putting 실력은 부족

- 세대갈등을 동력으로 삼은 노동개혁 모델
  - 핵심부(대기업∩정규직∩유노조)의 지대를 빼앗아 주변부 및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 예) 장년 임금피크제를 활용한 청년고용 증진(?)

< 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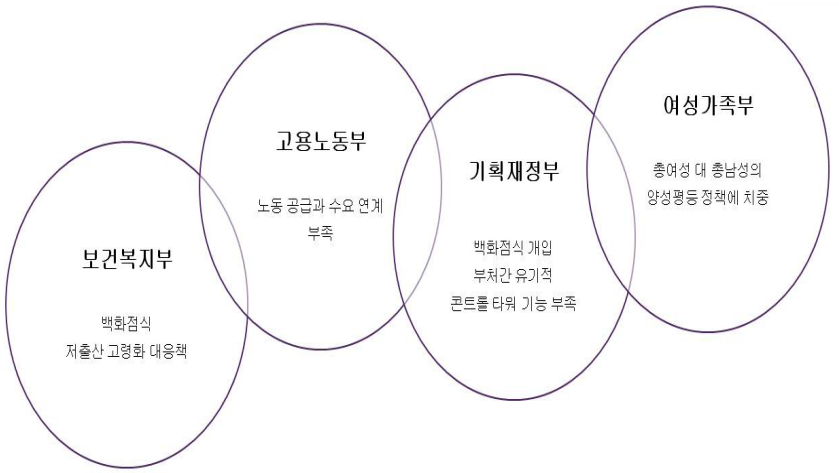
1. 2) 기존 노동 개혁의 문제점
2.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 부족

- 국가비전에 대한 부처별 가치 공유와 협력 부족
  - 콘트롤 타워의 비젼이 하위 기관에 전달되어 종합적 처방이 마련되지 못함
  - 기술적인 입법메뉴들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다소 부족했음

- 현상 대응형 노동개혁으로 입법-노사관계의 시계열상의 일관된 전략부재
  - 각 부처의 업무권한 및 실적확대에 초점을 둔 대책
  - 입법에만 치우쳐 노사관계 경직화 비용을 지불함

< 6 >

1. 2) 기존 노동 개혁의 문제점
2.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 부족



< 7 >

1. 3) 노동개혁의 대안적 방향
2. 세대간 동반상승을 위한 노동개혁

	베이비붐세대(1955-1963)	Echo 세대(1979-1985)
인구	695만명	510만명
2012년 상황	은퇴기(만 58-60세)	진입기(만 27-33세)
성장기 GNI	$255(70년)→$2,355(85년)	$11,735(95년)→$20,562(10년)
대학진학률	30%	**70%**
주거비용(표준화전세지수)	(명목 1.0) (실질 1.0) 1986년 기준	(명목 6.9) (실질 2.3) 2011년 기준
취업상황	인력난	취업난(NEET 비중 20~15%)
20대 후반 여성 미혼자	29.6%('95)	**69.3% ('10)**

출처: 박덕배(2012)

- 베이붐 세대를 위한 핵심노동시장 경직화 배태기
- Echo세대의 핵심노동시장 진입 장애와 주변부 노동시장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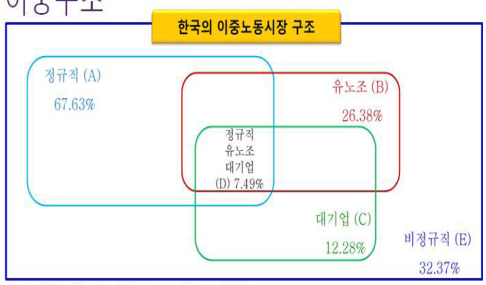
< 8 >

2.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방안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2. 1차(핵심) 시장 단협 구조개혁
3.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사태: 인력 감축과 사회 안전망 문제
4. 청년 일자리와 미래 노동시장

< 9 >

2.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4년 8월), 통계청.

1. D: (유노조∩대기업∩정규직) 시장지배력, 노동조합 및 고용보호 규제의 **중층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집단**	2. A+B+C-D: (유노조∪대기업∪정규직)-(유노조∩대기업∩정규직)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중 적어도 하나 또는 둘에 속한 근로자로서 D 그룹보다는 그 정도에 있어 약하나, **일정수준 보호를 받고 있는 집단**	3. E: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 시장지배력, 노동조합 및 고용보호 규제 중 어느 하나의 보호기제도 갖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가장 취약집단**

< 10 >

2. 1)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부문별 임금과 사회보장 격차

(단위 : 만원, %)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무노조	유노조	무노조	유노조	무노조	유노조	무노조	유노조
월평균 임금	135.9 (34.7)	160.0 (40.9)	216.5 (55.3)	310.9 (79.4)	255.8 (65.4)	231.5 (59.2)	360.6 (92.1)	391.4 (100.0)
사회보험								
국민연금	46.6	62.3	79.5	97.0	84.7	76.9	98.8	99.2
건강보험	97.5	98.6	98.9	99.9	100.0	99.6	99.9	100.0
고용보험	38.4	61.2	73.7	68.8	76.9	70.7	83.8	76.7
부가급여								
퇴직금	35.2	51.9	73.4	97.3	76.1	66.0	99.2	99.4
상여금	36.0	51.2	76.4	95.6	69.2	62.9	98.3	98.7
시간외수당	19.9	37.3	44.0	84.7	59.7	53.3	82.9	91.4
유급휴가	26.4	49.4	62.3	92.9	72.0	67.7	96.9	98.6
근로자비율	26.1	4.3	44.1	13.2	0.6	1.4	2.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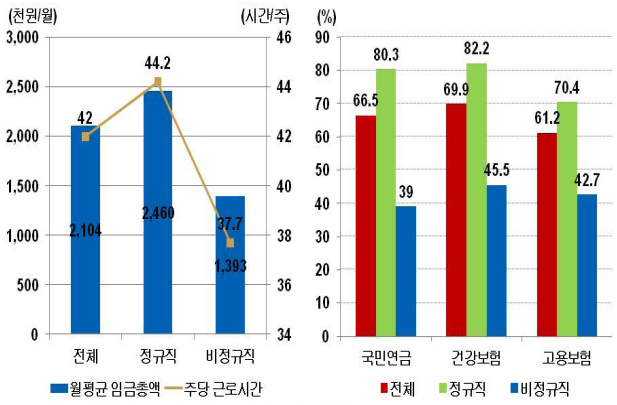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4년 8월), 통계청.

주변부 노동시장 ← → 핵심부 노동시장

11

< 11 >

2. 1)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 추이



주: 1) 월평균 임금총액은 각 연도 6~8월 평균치, 주당근로시간은 평소 근로시간임
2) 2010년부터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등은 분모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이장원(2014)에서 재인용

< 12 >

2. 1) 한국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중구조와 세대별 인구분포

이중노동시장 위치별 기초통계

	핵심부	주변부
월평균임금(만)	392.0 (100.0)	134.5 (34.3)
근속년수(년) 신규채용(%)	13.4 6.2	2.3 54.4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 가입(%)	99.5 99.8	34.2 40.9
퇴직금 적용(%) 상여금 적용(%)	99.6 99.1	36.4 36.6
근로자 수(천명)	1,363 (7.4%)	4,852 (26.4%)

- 핵심부 노동시장
  - 장기근속자 및 베이비붐 세대 포진
  - 호봉제+근속기간 → 높은 임금수준
- 주변부 노동시장
  - 신규채용자 및 청년세대 포진
  - 노동시장 취약계층 다수 분포
    - 고용보험 미적용, 낮은 임금수준

< 13 >

2.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왜 노동개혁을 해야만 하는가

➢ **대기업 고용 시스템의 경직성**

	전체고용보험 피보험자수(A)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B)	인력운용의 유연성 (A/B)
	11,571,213	825,561	7%
5인 미만	1,778,568	229,895	13%
5-30인 미만	3,100,149	300,313	10%
30-100인 미만	1,898,531	114,747	6%
100-300인 미만	1,563,073	68,848	4%
300-1000인 미만	1,145,984	56,861	5%
1000인 이상	2,084,908	54,897	3%

자료: 고용보험 데이터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을 인력운용의 경직성의 대리변수로 간주하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인력운용의 경직성이 커짐

< 14 >

2.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왜 노동개혁을 해야만 하는가

➢ **고용 시스템의 경직성와 청년일자리 파괴**

- 고용보호의 대기업노동시장 집중화는 청년일자리 창출 파괴
- (대기업 인력운영의 경직성*임금체계의 경직성) → 청년 대기실업
- 최근 통상임금, 정년제, 근로시간 단축은 이중노동시장 구조 악화를 가져와 청년일자리 파괴 촉진
- 노사협치로 이중노동시장 구조해소를 하기에는 노사관계 역량이 부족함

	고용률		실업률	
	30~54세 남성	20~29세 청년	30~54세 남성	20~29세 청년
모델 1) 고용보호 지수	0.037*	-0.206***	0.014	0.093***
모델 2)				
정규근로자보호지수	0.019	-0.064**	0.010	0.024
임시근로자보호지수	0.011	-0.072**	0.000	0.036*
집단해고 규제정도	-0.006	-0.077	0.014	0.029

자료: 김재훈 외 (2005), 주요국가의 인력활용 유형연구 및 고용의 유연안정화방안, 산업연구원
주: ***1% 유의수준,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1) 모델 1, 2에서는 노조조직률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서 추가

< 15 >

2.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왜 노동개혁을 해야만 하는가

➢ **경직적 노사관계는 국내 부가가치 유발을 가로막는 원인**

- 글로벌 경쟁 관계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가치 사슬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 존재
- 대기업은 해외공장이전,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내수도 국내일자리도 없음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국내 부가가치 유발 → 내수진작 → 국내 일자리 창출의 선 순환

< 16 >

2.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왜 노동개혁을 해야만 하는가

➢ **경직적 노사관계는 중국의 블랙홀로 진입속도 가속화**

- 주요국 수출부가가치유출률: 독일30.5%, 중국23.3%, 미국19.9%, 일본18.7%
- 2011년 기준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유출률 44.7, 4개국 평균보다 21.6%p높음
-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대상국은 중국이 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EU 4.4%, 일본 4.4%, 미국3.9%의 순서임

▸ 가치사슬에서 대기업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추격/중소기업은 인력난과 판로부족, 중견기업은 기술력과 자본부족을 호소

▸ 결국 이 문제는 1차노동시장 담합적 노사관계로부터 배태된(embedded) 노동시장의 비효율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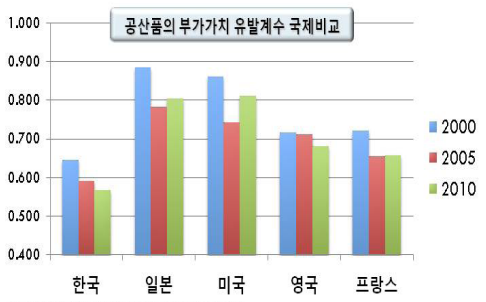
< 17 >

2.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구조개혁과 내수진작의 딜레마

➢ **국내일자리 창출이 중요**

▸ **생산성 동반 수출투자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 확대를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 **낮은 부가가치 창출 (높은 유실율) ➔ 국내 일자리 창출 없는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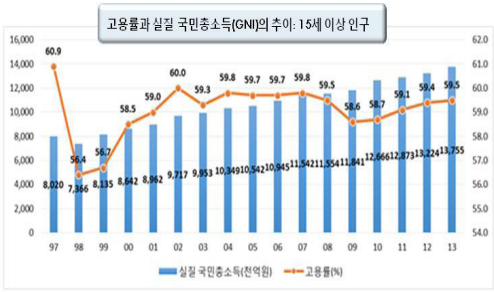


자료: 김상조 (2015),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들

< 18 >

2.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구조개혁과 내수진작의 딜레마

- ✓ 3만$ 국가 고용률 70% 안 되는 국가 거의 없음
  - 고용 없는 성장
  - 이는 저조한 낙수효과, 저조한 국내부가가치 유발과 궤를 같이 함



자료: 노동시장의 주요 현상(2015)

< 19 >

2.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구조개혁과 내수진작의 딜레마

- 엔진 = 구조개혁 & 연료 = 내수진작 위한 경기부양
- 연비 낮은 엔진으로 멀리 못 감



- 좋은 경제정책 x 노동시장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 20 >

2. 2) 1차(핵심) 시장 단협 개혁

1.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의 핵심
2. 1차 노동시장 단협 개혁
3. 단협 개혁 방안과 이탈리아 노동개혁 사례

< 21 >

2. 2) 1차(핵심)시장 단협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의 핵심

- 입법에만 의존한 유연화 개혁은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 핵심 노동시장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한 경직성을 더욱 강화함
  - 유연화 입법은 지금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주변부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함
- 법과 노사관계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 이중구조 개혁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사업장의 단협의 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실질효과 있음

< 22 >

2. 2) 1차(핵심)시장 단협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의 핵심

-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필요그룹 "대기업+정규직+유노조+대기업 (핵심 노동시장)"
  - 기존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연화 정책
    - 단순히 해고관련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로시간제도의 탄력성 제고, 배치전환, 임금체계 변화 등
    - 핵심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화를 통해 시장에서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과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 주변부 노동시장에는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 핵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주변부 노동시장의 고용안정 강화의 맞춤형 제도와 정책이 필요함

< 23 >

2. 2) 1차(핵심)시장 단협 개혁
1차 노동시장 단협: 과도한 교섭 비용

(1) 단체교섭비용의 개념

- 협의의 단체교섭비용은 교섭기간과 교섭횟수, 교섭 위원수, 교섭소요시간 등 실제 단체교섭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 광의의 단체교섭비용은 실제 교섭행위에 따른 비용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지 못하여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쟁의비용까지 합산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음. (광의의 단체교섭비용 추계 참조, 조준모)

(2) 단체교섭비용의 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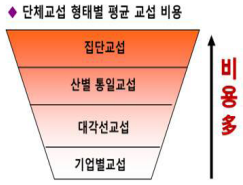
- 수치로 산정할 수 있는 협의의 교섭비용을 '교섭을 형함으로써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고 정의하고 교섭기간 중 근태인정에 대한 비율의 '가중치'를 부여.

- 사람중심의 계산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 교섭시간 중심 계산
(초기업단위 파견 전임자 비용은 포함 안됨, 2-2중교섭시도 사업장에서 투입된 교섭시간 산정)

교섭형태별 평균 교섭비용 (단위: (천 원))

교섭 형태	2006년 비용	2006년 순위	2007년 비용	2007년 순위
기업별교섭	34,801.03	④	28,040.88	④
대각선교섭	35,442.16	③	38,779.02	③
집단교섭	57,566.52	①	78,801.35	①
산별 통일교섭	50,994.42	②	55,043.57	②

◆ 단체교섭 형태별 평균 교섭 비용



< 24 >

2. 2) 1차(핵심)시장 단협 개혁
1차 노동시장 단협: 과도한 교섭 비용

▸ 각국의 단체교섭 제도.관행 비교 요약

구분	교섭주기(유효기간)	교섭빈도	교섭시간	교섭체제	
프랑스	·법제도 : 규정 있음, 5년의 유기협약, 무기협약도 가능, 임금교섭에 한하여 연차 교섭 ·관행 : 무기협약이 많음	-	-	난맥상 배제 못하나 그럴 가능성 낮고, 대표적 조합제도, 협약의 효력확장제도로 안정적	
미국	·법제도 : 규정 없음 관행: 4~5년, 임금협약 다년간 유효(4~5년)	-	-	대각선교섭, 배타적교섭 대표제도로 안정적	
일본	- 법제도 : 최장 3년 - 관행(포괄협약) - ('06년) 1년 이하 63.3%, - 1년 초과 3년 미만 28.7%, 3년 8%	('04~'07) ·20회이상: 8.2% ·10~19회: 13.2% ·5~9회: 29.0% ·4회이하: 49.6%	('04~'07) ·4시간 이상: 4.5% ·2~4시간: 21.8% ·2시간 미만: 73.8%	기업별교섭, 무분규 관행으로 안정적	

< 25 >

2. 2) 1차(핵심)시장 단협 개혁
1차 노동시장 단협: 과도한 교섭 비용

▸ 각국의 단체교섭 제도.관행 비교 요약 (계속)

구분	교섭주기(유효기간	교섭빈도	교섭시간	교섭체제	
독일	· 법제도 : 규정 없음 · 관행 : 임협은 2년이 많고, 다양한 유형의 단협은3~5년, 5~10년 등	-	-	중앙집권하의 산별 교섭 체제로서 안정적	
한국	· 법제도 : 최장 2년 · 관행 : ('06~'07년간) 임협 1년(93.5%), 단협 1년(28%), 2년(71.5%)	('06~'07) ·20회이상: 7.4% ·10~19회: 35.7% ·5~9회: 34.8% ·1~4회: 17%	('06~'07) ·4시간 이상: 12.8% ·2~4시간: 67.3% ·2시간 미만: 19.9%	·취약부문 매년 교섭, 중복교섭으로 교섭비용이 높음	

다년 교섭을 위한 자치노력 → 매년 교섭 사항의 축소, 임금안정사업장의 경우 다년협상

< 26 >

2. 2) 1차(핵심) 시장 단협 개혁
1차 노동시장 단협: 사적자치 부작용

조선일보 본문듣기

대기업 고용세습… 20년째 봐준 정부·국회

A12면 기사입력 2016-03-15 03:04 최종수정 2016-03-15 11:15

기사원문 2 2

[청년은 취업 안돼 우는데… 30대 기업 33% 버젓이 '자녀 우대']
고용부 "법적 기준 애매" 방치

세습 방지 법안도 여태 제자리… 노사도 아무런 시정 조치 안해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대 채용하는 등 기업의 '고용 세습' 관행이 무려 20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로선 일자리를 구하는 '공정한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노사의 부당한 야합'을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대 대기업 단체 협약 중 고용 세습 및 위법 조항

조항	기업명
정년퇴직자,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르노삼성자동차, SK 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GM
업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유일 교섭단체 조항(현 노조만 유일한 교섭 상대로 인정한다는 조항) - 복수노조제 위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2016년 3월 14일 기준. 고용부는 오는 18일 단체 협약 실태조사 최종 결과 발표 예정

하지만 "정부가 20년째 실태 조사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단협에 고용 세습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1996년 조사를 통해 이미 알려졌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이 1029곳 국내 기업의 단체협약서를 수집해 이 중 849개를 분석한 결과 32.9%의 단협에 노조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을 규정한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20년 동안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작년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727개의 단체협약 중 30.4%에서 고용 세습 조항이 발견된 데 이어 올해 고용부 조사에서도 대기업의 30%가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27 >

2. 2) 1차(핵심) 시장 단협 개혁
사적자치와 공동체 이익의 조화를 위한 단협 개혁

- 단체협약은 사적자치의 잉태물
  - 반면 대기업—정규직—노조 단체협약이 때때로 귀족노조의 철밥통이라 비판도 받고 이중노동시장의 콘크리트 역할
  - 불법소지 단체협약
    - 자녀채용가점: 직업안정법 등 법 위반소지
    - 유일교섭단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법 위반소지

- 단협에 호봉제가 명기되어 있고 총액인건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제로섬식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법 위반 소지있음
  - 사회통념에 부합되니 노조와의 협의 등을 생략하고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노동부 자체 지침과도 충돌됨
- 단협에 없는 경우 취업규칙변경이 필요
  - 공공상급 노조에 가입해도 해당사업장 문제: 해당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구하면 됨
  - 문제는 단협명기 그리고 교섭권을 상급에 위임하는 경우 변경이 사실상 어려움

< 28 >

2. 2) 1차(핵심) 시장 단협 개혁
사적자치와 공동체 이익의 조화를 위한 단협 개혁

- 공공부문
  - 단협평가를 통해 노사 스스로 삭제 및 조정하도록 하되,
  - 이러한 노력에 행·재정적 우대를 통해 자율적 노력 확산시켜야
- 사용자
  - 교섭시 단협재교섭시 문제조항들을 삭제하도록 노력하고,
  - 당장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타결보다는 교섭의 원칙을 정립해야
- 상급노조
  - 기업단위 노조에 비해 공익(청년일자리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능
  - 총노동 대 총자본의 이데올로기 투쟁의 창구로 활용해서는 안 됨

< 29 >

2. 2) 1차(핵심) 시장 단협 개혁
사적자치와 공동체 이익의 조화를 위한 단협 개혁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법상 사회통념에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이 아닌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것이 핵심
  - 단순 해고규제 완화 등은 도리어 법완화-단협강화로 이중구조 악화할 수 있음
- 공동체 이익과 조화되는 단체교섭
  - 사적자치는 보장하되
  - 최소한의 공익적 규율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30 >

2. 2) 1차(핵심) 시장 단협 개혁
이탈리아 렌치 정부의 노동개혁 시사점

- 신규채용 단협 + 기존 단협의 이중 단협 구조
  - '일자리법':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 정치적 유연전략
    - 입법 변경안을 신규 채용자에만 적용
    - 기득권 단협은 유지함으로써 노조가 신규 입법 수용하게끔
  - 정치권•노조 반발 최소화, 국민적 지지에 기반하여 정치개혁 + 노동개혁 동시 달성
  - 개혁의 목표를 청년 일자리 창출로 명시

-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1차 단협 개혁이 전제되어야
  - 렌치 수상의 노동개혁 사례에서 벤치마킹 포인트
    - 법과 단협의 조화 + 정치•사회적 마찰 최소화
    - 일관적이고 명확한 개혁목표, 대국민 설득 및 국민적 지지 얻기 위한 노력

< 31 >

2. 3)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사태:
인력감축과 사회안전망 문제

< 32 >

2. 3)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사태

- 조선이 살아도 연관산업의 전후방효과 감소 우려
  - 비용절감으로 중국판 중후판 수요 증가, 국내 철강산업수요 감소
- 구조조정의 실기 우려
  - 모피아 관료주의 폐해로서, 재정부실을 선거 이후 그리고 다음 정부로 떠넘김
- 단순히 물량팀 위주의 인력 감축 우려
  - 인력의 생산성 제고 위한 HR 구성의 재편성 되어야

< 33 >

ChosunBiz.com

프린트 닫기

법원 "STX조선, 채권단 오판으로 4조4000억 날려"

양은경 기자
입력 : 2016.06.01 03:08

"법정관리 빨리 신청했더라면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것"
"당시 상황 모르고 하는 말" 채권단, 법원 비판에 반박

STX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법원이 채권단의 판단 착오를 비난하는 이례적인 보도 자료를 내자 채권 금융회사들이 "당시의 시장 상황과 물정을 잘 모르고 하는 비판"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STX조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정만)는 지난 31일 "구조조정의 성패는 적기에 절차에 진입하고 공적자금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STX조선의 경우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4조4000억원이 쓸모없게 소모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STX조선 부실의 가장 큰 이유는 저가(低價)로 수주한 선박 건조계약인데 자율협약 절차에서는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채무액을 조정하는 정도에 그치다 보니 선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 조기(早期)에 회생신청을 했더라면 보다 빨리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강제 채무 조정이 가능한 회생절차에 들어온 이상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선주(船主)의 손해배상 채권을 정리하는 등의 포괄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 무원칙, 방임형 자율협약은 STX 전례 밟을 우려
- 차기 정부로 법정관리 넘어가면 국민부담은 5조에서 50조로 배가 됨

< 34 >

2. 3)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사태

- 현재 양적완화와 고용보험에 편중된 논의
  - 쓰기 쉽고, 국회의 동의 필요 없고, 있는 기금 사용
    - 모피아 중심의 부실 감추기 넘기기 진행 중
    - 고용보험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사회안전망
  - 모피아와 귀족노조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민 부담만 키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 5조의 부실이 다음 정부의 50조 부실이 되어 넘어갈 수 있음
  - 재정-공적자금-양적완화의 Optimal Mix
  - 고용보험-일반회계투입의 Optimal Mix (물량팀 등 비공식 노동시장의 공식 노동시장화)
- 정부의 리더십 + 정치권 협치 + 전문가에 의한 최적구조조정 방법 산정할 필요

2. 3)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사태

문화일보 경제

기사 게재 일자 : 2016년 06월 01일

부실규모도 모르면서 자구안 요구?

김준남기자 utopian21@munhwa.com

금융당국, 자본확충에만 급급
구조조정 '칫 단추'부터 잘못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의 정확한 부실 규모부터 산정해야 향후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무작정 해당 기업에 자구안부터 요구하는 등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조선·해운사의 이미 드러난 손실 규모와 향후 잠재 위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의 여신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부실이 심각하다면 채권은행은 여신이 매일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가 산출되면 현재 부실 조선·해운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자본 확충 규모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것이다.

- 기재부의 일반회계 절약 유인
  - 고용보험 기금으로 실업급여를 관대하게 지급, 일반회계를 절약하는 안을 선호할 수 있으나
  - 원칙있는 일반회계 투입으로 물량팀과 같이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노동시장으로 유도해야함
  - 물량팀을 방치하기보다는 제조업 파견 허용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도입에 고민해야 함

- 고용보험 + 일반회계를 산정하기 위해서 **인력의 실태파악과 규모산정**이 먼저 추정되어야

2. 3)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사태

- 인력 구성에 따른 문제
  - 고용보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정하여도 물량팀의 대다수는 수혜 범위에서 벗어남
    - 고용보험 가입집단: 직접고용(20%), 사내하청 협력사(40%)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수혜대상
    - 비수혜 집단: 물량팀 (40%, 이중 10%정도만 고용보험 가입)

- 그러나 장부상 고용보험법상 고용관계가 있는 물량팀 에 고용보험 지급 심사를 관대하게 할 경우 고용보험 재정은 급속도로 확대될 수도 있음

한국과 독일의 조선업 고용형태 비교

	한국	독일
정규직	20%	40%
물량팀	40%	20% (파견)
협력사	40%	40%

< 37 >

2. 3)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사태

- 인력구성 및 사회안전망 범위도 조정할 필요
  - 향후 4대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제도 및 노사관계 개혁 필요
    - 물량팀을 전체 인원의 10% 이하로 최소화하고, 향후 (재)계약시 4대 보험 가입 강제화
    - 정규직 구성을 늘리고, 정규직 노조는 유연성 조치 어느 정도 수용
    - 제조업(상용직) 파견 제도 허용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비공식 물량팀·고용안정정책 주문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문제를 국가에 떠 넘기는 꼴)

- 관대한 지원 + 엄정한 원칙 →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규율 정립
- CEO의 경영상 책임 + 생산직 노조에 대한 인력감축 → 노사 간 고통분담

- 숙련 형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인사관리 유연성 제고 달성해야

< 38 >

2. 4) 청년 일자리

1. 인구구조와 청년 노동시장

2. 미래사회의 청년 일자리 정책:
   기술혁신 주도형 청년 인재 양성

< 39 >

2. 4) 청년 일자리
청년고용대책 물량 홍수

취업 지원책 '홍수'...대학들은 몸살

정부·지자체 앞다퉈 쏟아내
정책만 207개...내용은 비슷
대학 "주체 많아 '업무' 마비"
부처간 엇박자에 참여 포기도
학생은 "참가 독촉" 불만 토로

박진용 기자 2016-05-27 18:14:44 사회



(중략)

27일 대학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취업 관련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만 207개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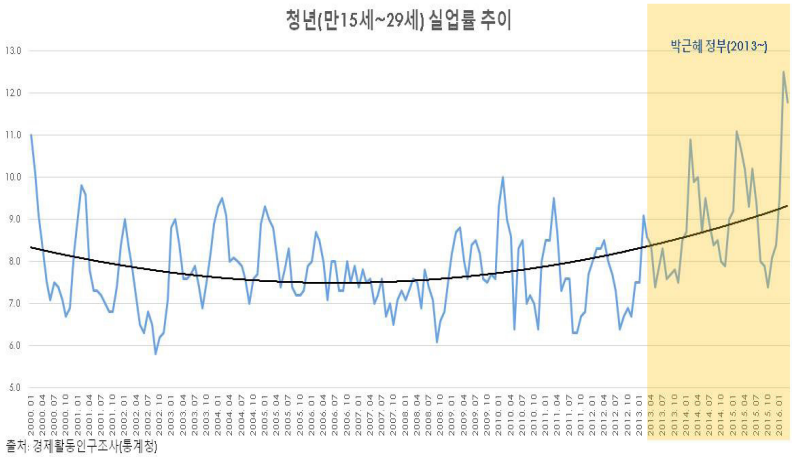
A대학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취업지원책이 대부분 엇비슷하고 대학 자체적으로도 이미 열댓 개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학생들이 관심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서울시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A대학에서도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최종 취업 연계 단계까지 참여하는 학생은 5명 가운데 1명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연간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도는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마다 13만명가량의 청년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모두 1단계 상담전형에서 최소 15만원을 지원금으로 받는 만큼 연간 200억원이 상담 참여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 반면 이 사업에 끝까지 참여해 취업을 하더라도 1년 후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각 대학도 정부 등쌀에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청년취업정책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대학가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불평소리도 나올 정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4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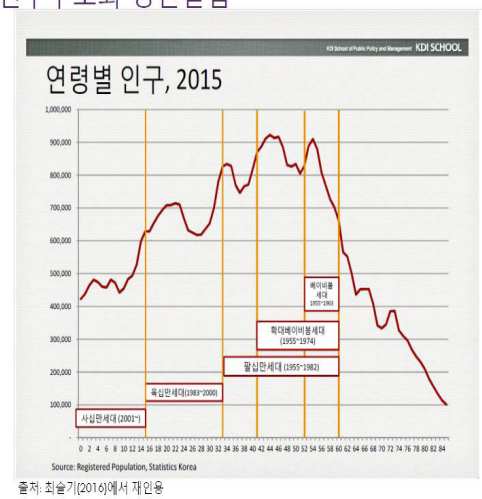
2. 4) 청년 일자리
청년실업 고공행진



출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41 >

2. 4) 청년 일자리
인구구조와 청년실업



- **경제성장기의 인구구조 변화**
  - 확대 베이비붐 세대(1955~74년생):
    연간 신생아 수 80~90만 명 규모 (일부 90만 명 상회)
  - 경제개발계획(1962) 이후:
    노동수요 폭증, 대기업 성장, 농촌-도시 이주현상 가속화
- 노동공급 폭증을 흡수할 수 있었음

- **2000년대 후반 청년 인구구조**
  - MB, 박근혜 정부의 20~25세 청년 인구는 모두 '육십만 세대(1983~2000)'에 속하나,
  - MB정부 시기는 60만 명 저점의 Convex curve
  - 박근혜정부는 70만 명 고점의 Concave curve
- 박근혜정부 청년실업 고공행진은 인구구조 변화에 도 기인함

출저: 최슬기(2016)에서 재인용

< 42 >

2. 4) 청년 일자리
인구구조와 청년실업

- 청년 인구 전망 및 정책적 함의
  - 출생아 수 40만 세대(2001년생~) 진입: 차기말, 차차기 정부의 청년층 구성
  - 청년실업 완연히 해소될 전망, 차기 정부 말기에는 현상태 유지하여도 고용률 70% 달성 (이시균, 2016)
  - 박근혜 정부의 청년정책은 예산 대비 정책생산성 낮을 수 밖에 없음
    - 청년 정책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도 낮음
    - 반면 **여성 고용정책**은 적은 예산으로도 고용률 제고에 상대적으로 큰 기여

- 청년고용 문제와 정책의 방향: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혁
  - 청년고용계치에 一喜一悲하는 정책은 지양

    ↔ 노동시장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향한 일관된 제도개혁 노력
  - 40만 세대가 질 좋은 인적자본으로 질 좋은 일자리에서 생산성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43 >

2. 4) 청년 일자리
기술혁신 시대의 청년 일자리 정책

- 제조업 고용 변동과 청년 일자리
  - 제조업 전체 고용은 증가 추세로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나,
  - 이와 동시에 제조업 고용 고령화 추세
    - 청년층 고용 감소하고 50대 이상 고용 증가
    - 청년층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업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등)에서도 청년 고용 감소

출처: 권혜자 외 (2015), '제조업 고용 변동 분석'

- 4차 산업혁명시대 맞이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 제조서비스, 융복합제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구조
  -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 44 >

2. 4) 청년 일자리
기술혁신 시대의 청년 일자리 정책

- 노동시장의 미래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 기술혁신이 일자리 창출에 미칠 영향 전망
    - (+) 영향: ICT 중심의 기술 융합으로 신산업 등장,
    - (-) 영향: 기술발전과 이에 대한 수용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

출처: KRIVET Issue Brief (2016년 100호)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고용안정성 격차는 기술혁신과 일자리 대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 기술혁신은 1차 노동시장을 축소하고
  - 2차 노동시장의 노동력을 더 많이 대체하고, 2차 시장을 더욱 균열화(특수고용형태 다변화, 종사자수 증가)
- 1차 노동시장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법 유연화
- 2차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45 >

3. 결언 및 남은 과제

< 46 >

3. 결언
3. 1)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전략

- 스마트 노동개혁 사례 벤치마크
  - 이탈리아 렌치 노동개혁
    - 이중 단체협약 (기존 단협 유지 + 신규 채용자에만 입법 적용): 기득권 일부 인정하고 노조의 지지 얻어냄
    - 정치 개혁과의 동시 추진으로 국민적 지지, 정치계 및 노동계 반발 최소화
  - 범정부 차원에서 비젼과 전문성을 가지고 조율된 전략 수행

- 2010 노조 전임자제도 개혁 (명분과 실리를 확보한 노동개혁 사례)
  - 국제 기준에 맞춘 개혁, 제도의 부당성에 바탕을 둔 개혁 명분
    - 야당 환노위 위원장조차 동의, 노동계의 반대투쟁명분도 적었음
- 현재 노동5법 개혁 (명분 프레임과 실리가 불분명한 노동개혁 사례)
  -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가? 대국민 프레임 설득이 미비했음 (예시: 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창출, 2대지침)
  - 이해관계자들의 실적 포장, 노동계에 반대명분('쉬운 해고' 비판) 제공

< 47 >

3. 결언
3. 1)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전략

- 노동시장 유연성 + 안정성 제고의 지향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핵심 노동시장의 단체협약 유연화
  - 주변부 노동시장은 더 크고 넓은 사회안전망

- 이중노동시장 개혁은 현정부 넘어선 중장기 과제
  - 해외 사례(독일: 슈레더-메르켈; 이탈리아:베를루스코니-몬티-랜치)
  - 한국 사회의 미래비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 48 >

3. 결언
3. 2) 세대간 상생형 노사관계

- 노동개혁 핵심은 핵심노동시장 단체협약의 개혁
  - 사적자치와 노사에 의한 자율적 공익 실현의 관행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해야
  - 유연화를 위한 단순 해고규제 등은, 즉 입법-단협 간의 불균형은 이중구조 악화시킬 수 있음
- 세대간 상생을 위한 단체교섭 구조의 개편
  - 단체교섭 구조개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결의 전제
  - 노동입법과 사회안전망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 세대간 상생을 지향하는 자율적 단체협약의 Best Practice를 확산시켜 나가야 함
- 동시에 대기업 단체교섭에 공익과 사적자치의 조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할 수 있음

< 49 >

3. 결언
3. 3) 노동시장 정책의 미래 비젼과 청년 일자리

- 청년 실업 문제와 인구구조
  - 고용율만 제고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은 예산대비 가성비가 낮은 정책임(여성고용정책이 가성비 높음)
  - 차기, 차차기 정부에서, 청년 인구 감소로 일자리 부족 문제의 고용%수치 측면은 다소 진정될 것
  - 그러나,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어려울 것
- 기술변화-공유경제-노동시장 유연화 패키지: 청년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
  - 베트남, 중국의 젊은이들과 인건비 경쟁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실리콘밸리, 구글 테스라의 젊은이들과 경쟁하도록
  - 한편,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대기업 노동시장 경직성 아래에서 청년일자리가 고사화 될 수 있음
  - 미래 노동시장의 균열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방지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제 및 사회안전망 보호에 획기적인 개선 필요

< 50 >

부록: 이중구조 실증분석

조준모 이재성 (2015), working paper

< 51 >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 분석

분석모형



➢ Logit 분석

- 종속변수: [모형1] 사회보험 모두 적용=1
  [모형2] 부가급여 모두 적용=1
- 설명변수: 성별, 나이, 교육정도,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기업규모(300인 이상 대기업 여부), 노조가입여부, 산업분류 등
- 교호항: 성별,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조가입여부의 교호항

52

< 52 >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 분석

사회보장배제 결정요인 분석결과

	Social insurance	Fringe benefits
Female	-0.155**	-0.028**
Non-standard employment	-0.062**	-0.052**
(1-Large enterprise)	-0.043**	-0.099**
(1-Unionized)	-0.034**	-0.159**
Interaction Terms		
Female × Non-standard employment	-0.443**	-0.264**
Female × (1-Large enterprise)	-0.036	-0.011
Female × (1-Unionized)	-0.180**	-0.039
Female × Non-standard employment × (1-Large enterprise)	-0.053	-0.119**
Female × Non-standard employment × (1-Unionized)	-0.354**	-0.126*
Female × (1-Large enterprise) × (1-Unionized)	-0.055	-0.158**
Female × Non-standard employment × (1-Large enterprise) × (1-Unionized)	-0.149**	-0.132**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시자료(2009년 8월), 통계청. 조준모 이재성(2015)
주: **, *은 각각 1%,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53

< 53 >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

각 요소별 사회보장 배제율

	Social insurance	Fringe benefits
1. Non-standard employment	0.409	0.288
2. (1-Large enterprise)	0.064	0.191
3. (1-Unionized)	0.185	0.205
4. Female	0.650	0.383
5. Non-standard employment × Female	0.801	0.548
6. (1-Large enterprise) × Female	0.049	0.213
7. (1-Unionized) × Female	0.399	0.24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시자료(2009년 8월), 통계청. 조준모 이재성(2015)

※ Non-standard employment와 Female이 결합했을 경우 Female 단독일 때보다 **사회보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약 1.3배** 정도, **부가급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약 1.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나서 '성별 X 고용형태'가 복합배제 효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음.

< 54 >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구조

이중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적 평가 (부록의 실증분석 참조)

-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험 적용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지며, 반대로 대기업에 속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일수록 사회보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짐.
- 대기업-노조가입-정규직-남성근로자의 특징을 가지는 집단이 내부자 중심이어서 중소기업-노조미가입-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 외부자 배제적이라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음.
- 대기업-노조 부문의 경우 단체협약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반면 그 외 부문은 법의 적용을 받아 대기업-노조 부문의 사적자치가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배태하는 측면이 있음

55

< 55 >

노동시장간 이동

한국 노동시장의 부문간 이동(transition) 확률

		t+1, t+2, t+3, ...					
		LS	LN	SS	SN	IA	SE
t	LS						
	LN						
	SS						
	SN						
	IA						
	SE						

주: LS(대기업-정규직), LN(대기업-비정규직), SS(중소기업-정규직), SN(중소기업-비정규직), IA(비경제활동), SE(자영업)을 나타냄.

56

< 56 >

부록: 노동시장간 이동에 관한 분석

한국 노동시장의 부문간 이동(transition) 확률

		LS	LN	SS	SN	IA	SE
2004-2005	LS	61.13	4.55	21.46	3.17	7.12	2.57
	LN	8.93	39.73	7.59	22.77	17.86	3.13
	SS	13.96	1.63	66.83	4.97	9.08	3.54
	SN	1.54	10.28	10.03	58.35	15.94	3.86
	IA	3.22	2.24	4.66	4.52	82.14	3.22
	SE	0.71	0.79	1.67	1.82	6.11	88.90

		LS	LN	SS	SN	IA	SE
2004-2007	LS	67.17	3.75	19.93	1.41	5.98	1.76
	LN	4.71	55.80	4.71	18.48	14.49	1.81
	SS	12.85	1.06	73.43	3.48	7.05	2.13
	SN	1.17	13.67	8.20	61.72	12.30	2.93
	IA	3.20	2.64	4.31	3.57	84.14	2.13
	SE	0.51	0.95	2.11	1.53	5.17	89.72

		LS	LN	SS	SN	IA	SE
2004-2009	LS	80.05	1.79	11.00	1.02	4.48	1.66
	LN	11.40	57.33	1.63	16.29	11.73	1.63
	SS	27.08	1.82	56.42	3.65	8.33	2.69
	SN	4.99	23.35	6.24	48.13	14.26	3.03
	IA	3.47	4.15	3.03	3.22	83.16	2.98
	SE	1.18	0.44	0.81	0.96	4.87	91.73

자료: 한국노동패널데이터 7차-12차(2004-2009), 한국노동연구원, 조준모 이재성(2015)
주: 1. LS(대기업-정규직) LN(대기업-비정규직) SS(중소기업-정규직) SN(중소기업-비정규직) IA(비경제활동) SE(자영업)을 나타냄. 2. 단위는 %임.

57

57

< 57 >

부록: 노동시장간 이동에 관한 분석

분석모형



➢ Multi-nominal Logit 분석

- 종속변수: 기준시점에서 다음시점으로 이동 시 현재의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음.
- 설명변수: 개인특성변수(성별, 나이, 경력, 결혼여부, 성별x나이, 성별x경력 등) 가족특성변수(가구주 여부, 가족 수 등), 산업분류, 직업분류

➢ Dynamic Panel Multi-nominal Logit 분석

- 종속변수: IA 기준=0
- 설명변수: 다항로짓 분석과 동일

58

< 58 >

부록: 노동시장간 이동에 관한 분석

노동시장간 이동 결정요인 분석

	Transition out of Large and Standard					Transition out of Large and Non-standard				
	LS → LN	LS → SS	LS → SN	LS → IA	LS → SE	LN → LS	LN → SS	LN → SN	LN → IA	LN → SE
Gender	-4.967***	-1.120***	-1.256	-1.950***	1.955**	1.204	6.140***	0.697	0.558	2.163
Age	0.160**	0.009	0.411***	0.001	0.290***	0.000	0.311**	0.030	0.003	0.966***
Experience	-0.042	-0.155***	-0.200***	-0.520***	-0.353***	0.359***	-0.141*	-0.211***	-0.407***	-0.120
Marriage	-0.547***	0.146	-0.526**	-0.320*	-0.329***	-0.052	0.017	0.099	0.027	-0.244
Gender ×Age	0.110***	0.035***	0.044**	0.042***	-0.039**	-0.106***	-0.154***	-0.030*	-0.022**	-0.016**
Gender ×Experience	-0.123***	-0.037**	-0.092**	-0.091*	-0.071***	0.639***	0.173*	0.236***	-0.025	-0.058

자료: 한국노동패널데이터 7차-12차(2004-2009), 한국노동연구원.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LS(대기업-정규직) LN(대기업-비정규직) SS(중소기업-정규직) SN(중소기업-비정규직) IA(비경제활동) SE(자영업)을 나타냄.
3. 개인특성변수(교육수준, Age^2, $Experience^2$, 지역 등), 가족특성변수(가구주여부, 가족수 등), 산업분류, 직업분류 등은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에서는 생략하였음.
4. 2004년에서 2009년으로 이동한 것을 분석한 결과값임.

59

< 59 >

부록: 노동시장간 이동에 관한 분석

노동시장간 이동 결정요인 분석[계속]

	Transition out of Small-medium and Standard					Transition out of Small-medium and Non-standard				
	SS → LS	SS → LN	SS → SN	SS → IA	SS → SE	SN → LS	SN → LN	SN → SS	SN → IA	SN → SE
Gender	+	-	-		+		-			-
Age		+	+	-	+	-	+	+	-	+
Experience		-		-			+		-	
Marriage					+			-		
Gender ×Age	-	+	-	-	-		+			+
Gender ×Experience	+	+			+	+		-		-
	Transition out of Inactive					Transition out of Self-employed				
	IA → LS	IA → LN	IA → SS	IA → SN	IA → SE	SE → LS	SE → LN	SE → SS	SE → SN	SE → IA
Gender	+			+	-	-	-	-	-	-
Age	+		+	+	+		-			
Experience	+	+	+		+	-	-	-	-	-
Marriage	-		-	-	+		-		-	
Gender ×Age	-				+	+	+	+		+
Gender ×Experience	-		+		-				+	-

60

< 60 >

노동시장간 이동

실증연구의 함의 (부록 참조)

- 첫째,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핵심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큼을 알 수 있음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연계성?).
- 둘째, 경력기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핵심부 노동시장 혹은 초기 자신이 속해있던 노동시장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고, 짧은 근로자일수록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큼을 알 수 있음.
-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주일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핵심부 노동시장에 잔류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음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연계성?).
- 이상의 분석결과 각 노동시장간 이동을 결정하는 요소는 개인특성변수 및 가족특성변수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패턴은 시간에 따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61

< 61 >

부록: 노동시장 간 이동에 관한 분석

이동노동시장간 결정요인 분석

		기준상태:IA				
		LS	LN	SS	SN	SE
t-1 상태	LS	3.492***	2.732***	1.995***	1.076***	1.280***
	LN	1.298*	4.271**	2.261***	1.932**	2.200**
	SS	1.590***	1.209***	2.286***	2.003***	1.989***
	SN	1.224**	1.013***	0.981**	3.392***	2.298*
	SE	0.852***	0.925***	1.382**	1.371*	4.071***
개인특성변수	Gender	0.392**	0.306	0.258***	-0.119	-0.214
	Age	0.110**	-0.098	0.091***	0.162	0.132
	Experience	0.062***	0.027**	0.045*	-0.031	0.038
	Marriage	-0.163**	-0.189	-0.141*	-0.178**	0.152
	Gender ×Age	0.064**	0.012	0.002	-0.014	0.057**
	Gender ×Experience	0.248**	0.107*	0.016	-0.248	-0.093

주: 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LS(대기업-정규직) LN(대기업-비정규직) SS(중소기업-정규직) SN(중소기업-비정규직) IA(비경제활동) SE(자영업)을 나타냄.
3. 개인특성변수(교육수준, Age, Experience, 지역 등), 가족특성변수(가구주여부, 가족수 등), 산업분류, 직업분류, 조기상태 등은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표에서는 생략하였음.

62

< 62 >

노동시장 간 이동 실증분석 연구의 함의

- 첫째, 초기(1) 및 전기(t-1)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전기의 상태가 동일하게 다음기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둘째,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 그리고 경력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주변부 노동시장보다는 핵심부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큼을 알 수 있음.
-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주일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핵심부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음.
- 이상의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에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임
  - (정년들이 주변부 노동시장 진입보다 핵심부 노동시장의 대기실업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함의 제공).

발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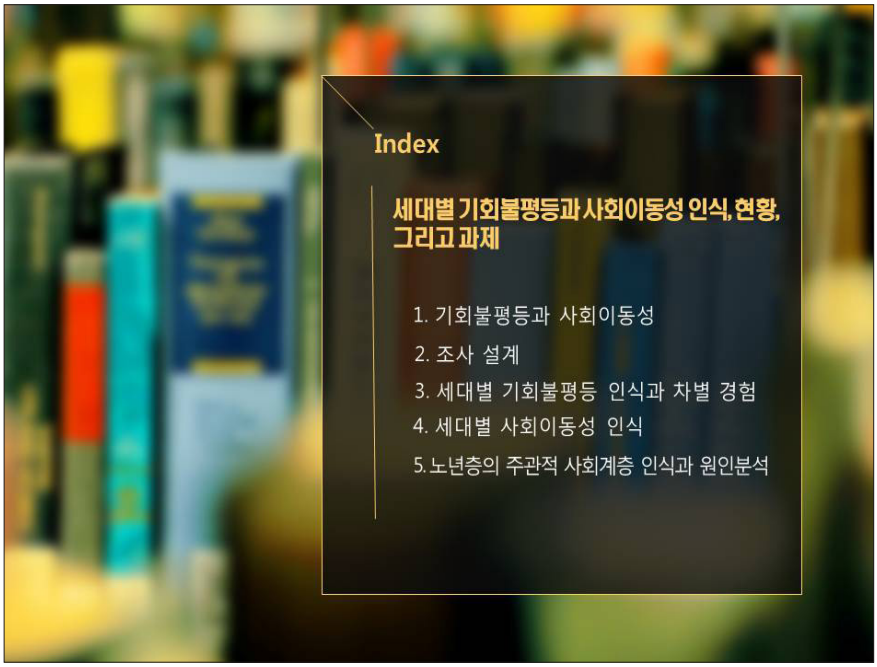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 인식, 현황, 그리고 과제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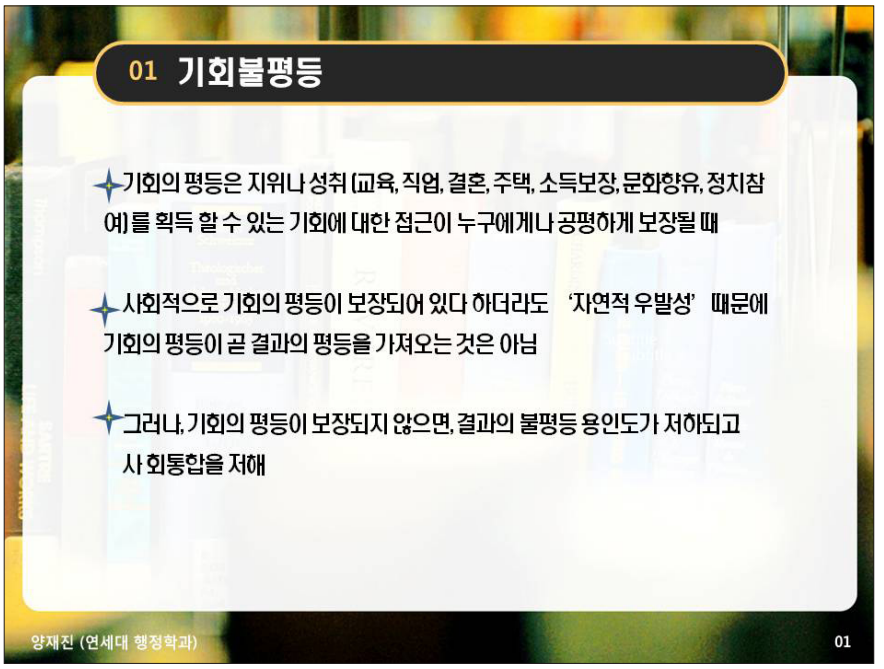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
인식, 현황, 그리고 과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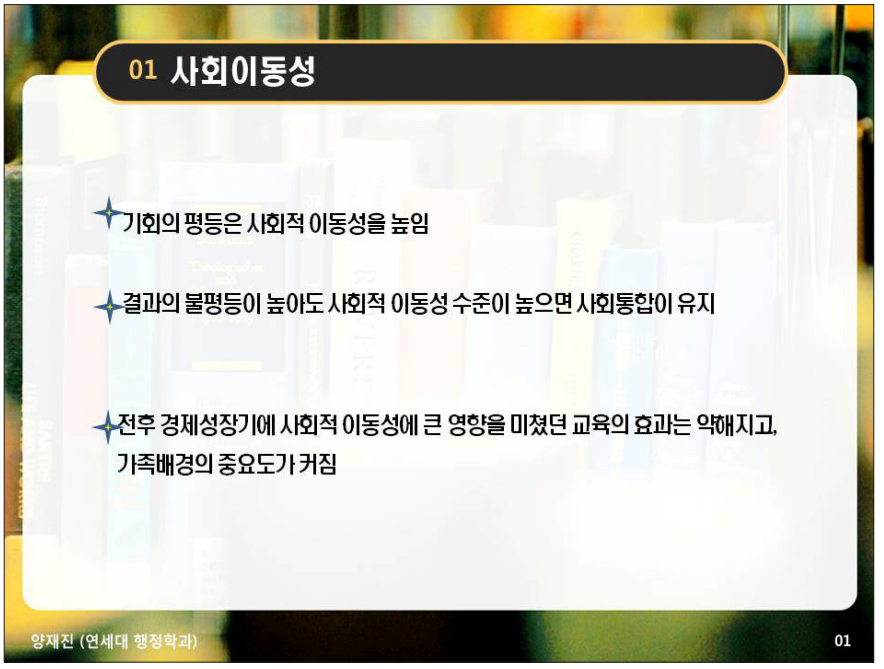
< 1 >


Index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 인식, 현황, 그리고 과제
1.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
2. 조사 설계
3. 세대별 기회불평등 인식과 차별 경험
4. 세대별 사회이동성 인식
5. 노년층의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과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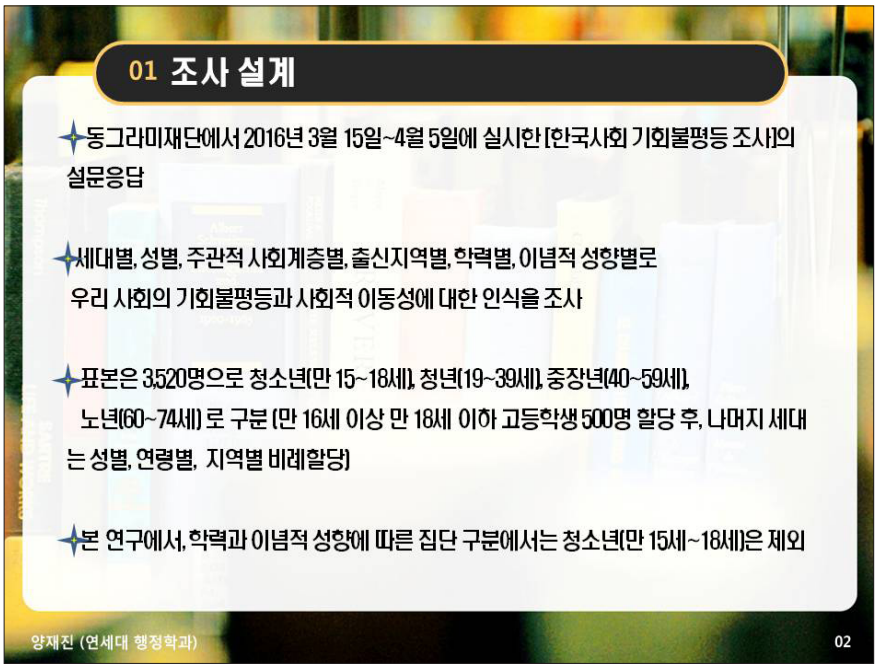
< 2 >


01 기회불평등
기회의 평등은 지위나 성취 (교육, 직업, 결혼, 주택, 소득보장, 문화향유, 정치참여)를 획득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접근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될 때
사회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연적 우발성'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 곧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
그러나,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과의 불평등 용인도가 저하되고 사회통합을 저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1

< 3 >


01 사회이동성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이동성을 높임
결과의 불평등이 높아도 사회적 이동성 수준이 높으면 사회통합이 유지
전후 경제성장기에 사회적 이동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고, 가족배경의 중요도가 커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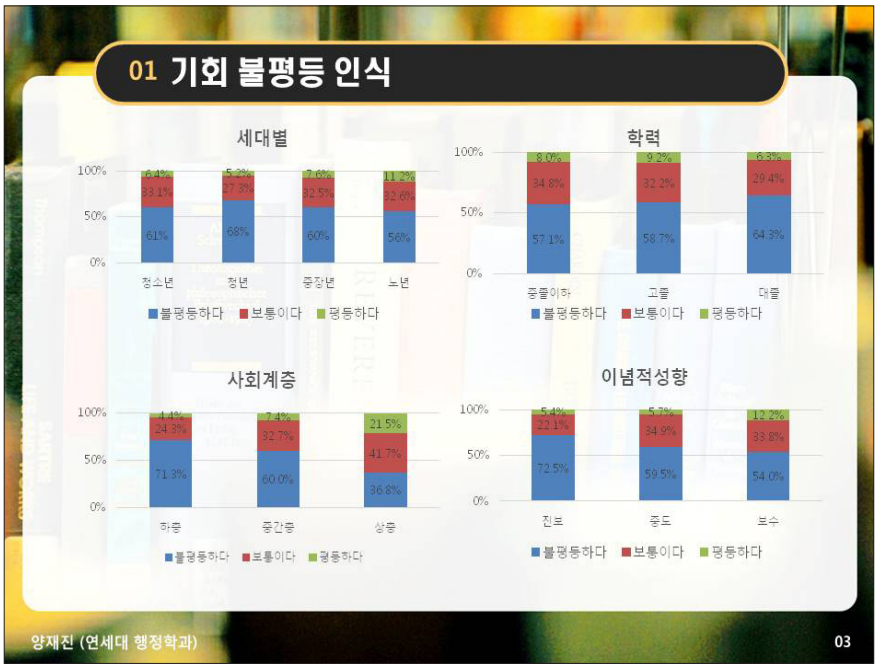
< 4 >


01 조사 설계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4월 5일에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의 설문응답
세대별, 성별, 주관적 사회계층별, 출신지역별, 학력별, 이념적 성향별로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
표본은 3,520명으로 청소년(만 15~18세), 청년(19~39세), 중장년(40~59세), 노년(60~74세)로 구분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 고등학생 500명 할당 후, 나머지 세대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본 연구에서, 학력과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는 청소년(만 15세~18세)은 제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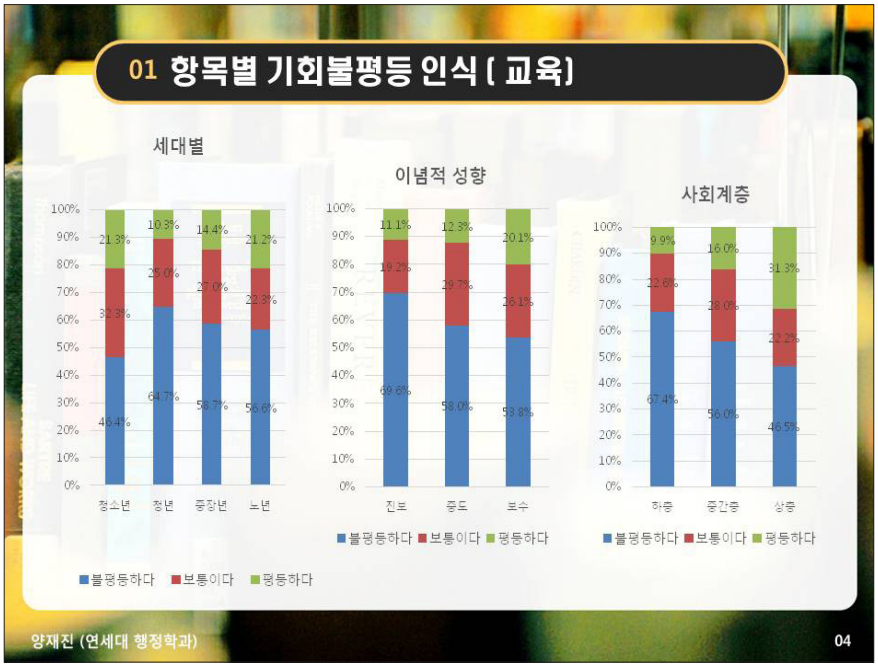
< 5 >


01 소득불평등 인식
세대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출신지역
서울 경기인천 경상도 전라도 충청 강원제주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사회계층
상층 중간층 하층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이념적 성향
진보 중도 보수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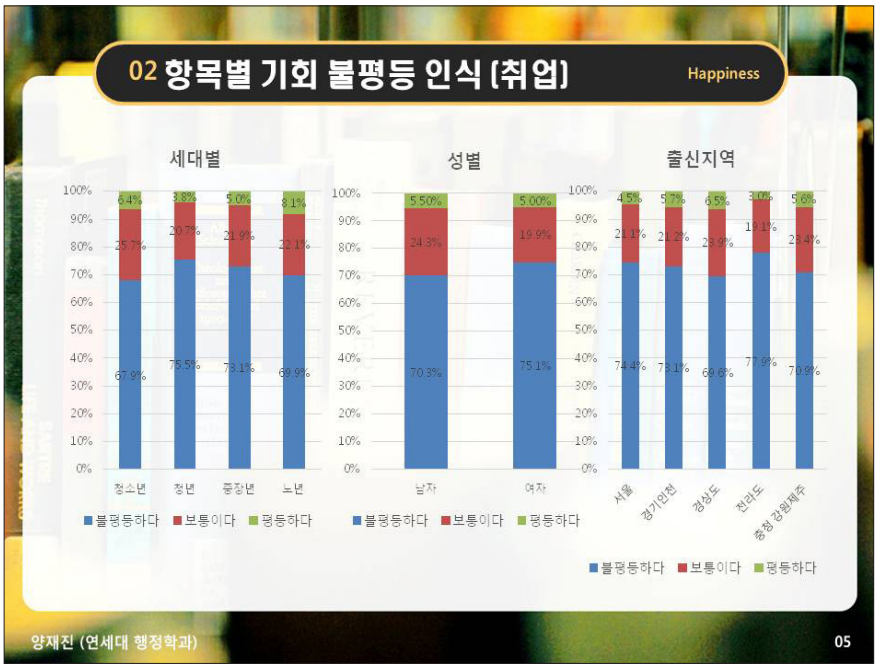
< 6 >


01 기회 불평등 인식
세대별
학력
사회계층
이념적성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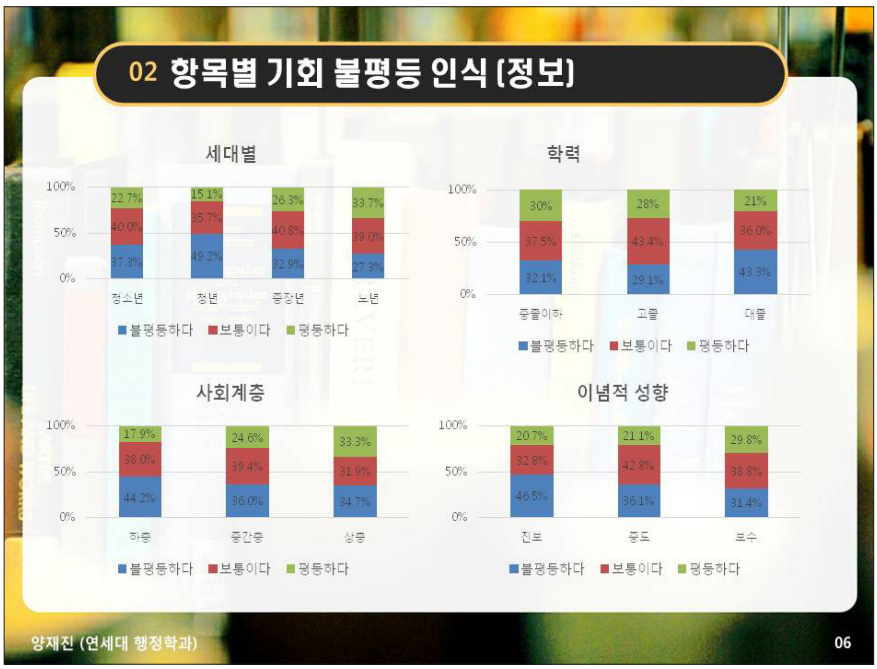
< 7 >


01 항목별 기회불평등 인식 (교육)
세대별
이념적 성향
사회계층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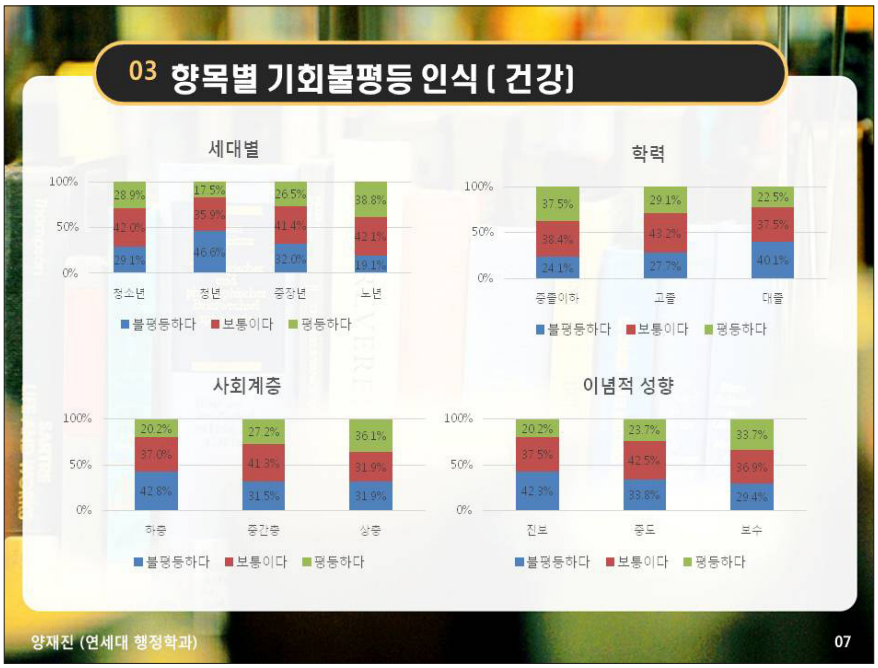
< 8 >


02 항목별 기회 불평등 인식 (취업)
Happiness
세대별
성별
출신지역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자
여자
서울
경기인천
경상도
전라도
충청 강원제주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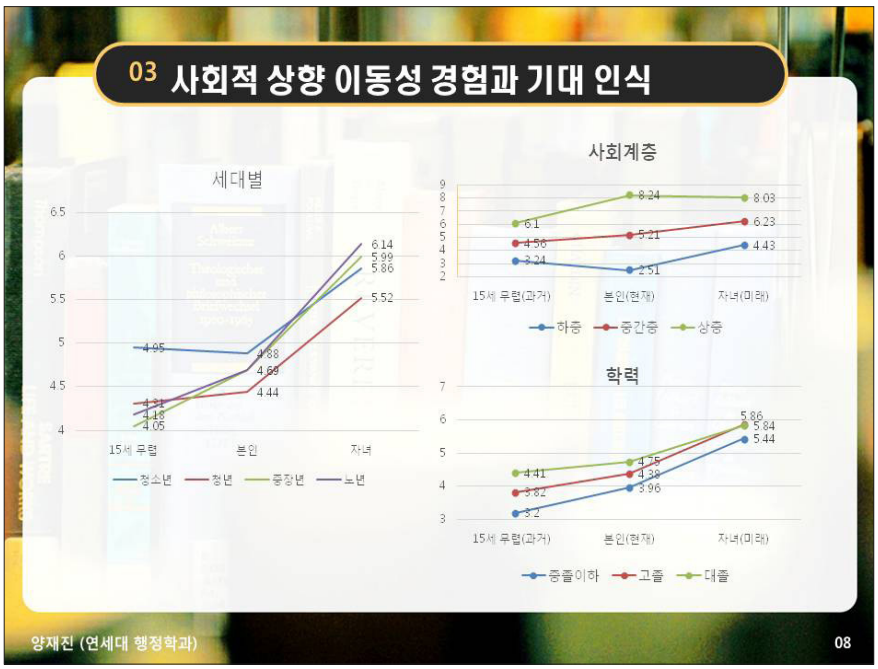
< 9 >


02 항목별 기회 불평등 인식 (정보)
세대별
학력
사회계층
이념적 성향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중졸이하
고졸
대졸
하층
중간층
상층
진보
중도
보수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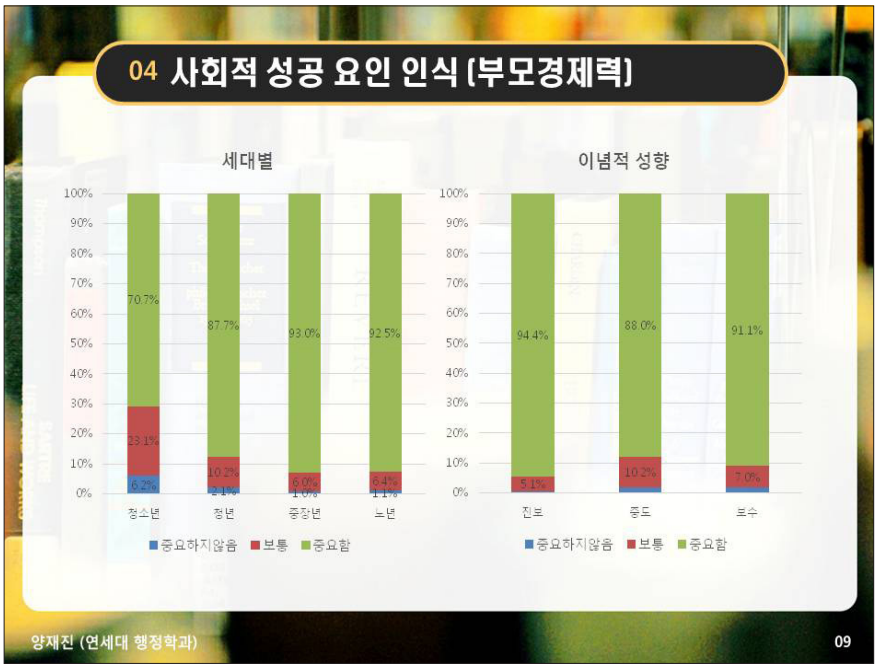
< 10 >


03 향목별 기회불평등 인식 (건강)
세대별
학력
사회계층
이념적 성향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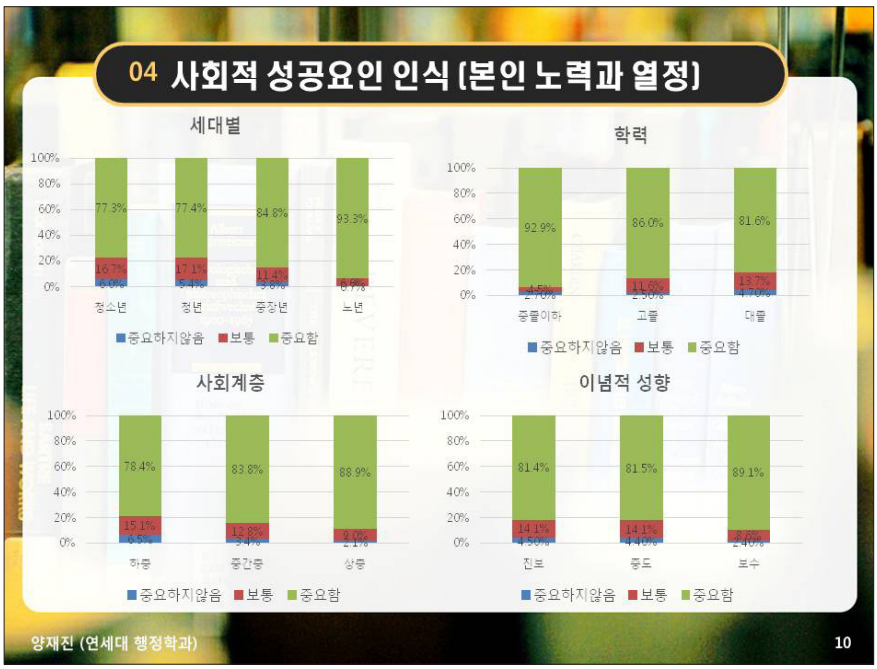
< 11 >


03 사회적 상향 이동성 경험과 기대 인식
세대별
사회계층
학력
15세 무렵
본인
자녀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하층
중간층
상층
중졸이하
고졸
대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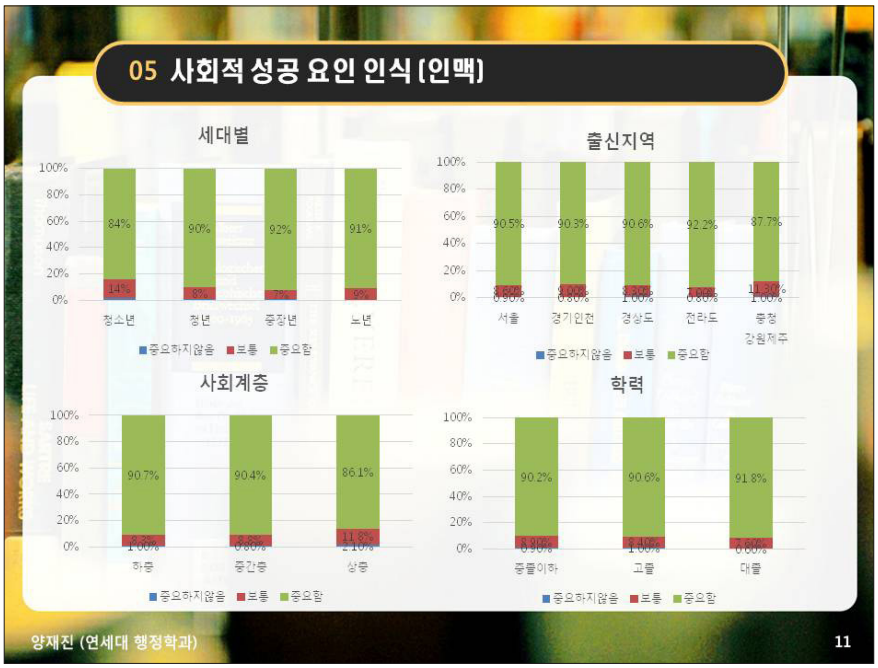
< 12 >


04 사회적 성공 요인 인식 (부모경제력)
세대별
이념적 성향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70.7%
23.1%
6.2%
87.7%
10.2%
2.1%
93.0%
6.0%
1.0%
92.5%
6.4%
1.1%
94.4%
5.1%
88.0%
10.2%
91.1%
7.0%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진보
중도
보수
중요하지않음
보통
중요함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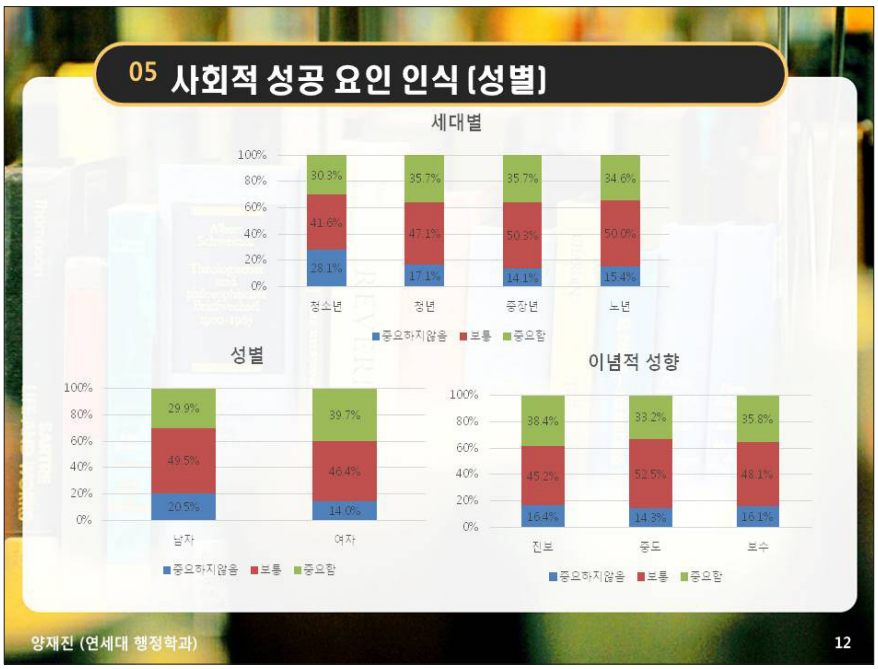
< 13 >


04 사회적 성공요인 인식 (본인 노력과 열정)
세대별
학력
100%
80%
60%
40%
20%
0%
77.3%
16.7%
6.0%
77.4%
17.1%
5.4%
84.8%
11.4%
3.8%
93.3%
6.7%
92.9%
4.5%
2.7%
86.0%
11.6%
2.5%
81.6%
13.7%
4.7%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중졸이하
고졸
대졸
중요하지않음
보통
중요함
사회계층
이념적 성향
78.4%
15.1%
6.5%
83.8%
12.8%
3.4%
88.9%
9.1%
2.1%
81.4%
14.1%
4.5%
81.5%
14.1%
4.4%
89.1%
8.6%
2.4%
하층
중간층
상층
진보
중도
보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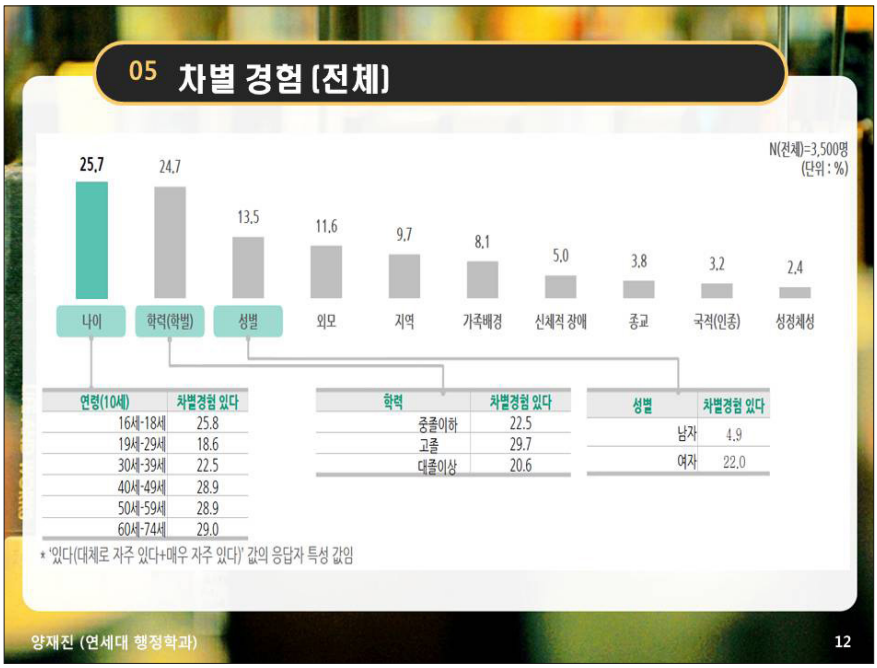
< 14 >


05 사회적 성공 요인 인식 (인맥)
세대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84%
90%
92%
91%
14%
8%
8%
9%
중요하지않음 보통 중요함
출신지역
서울
경기인천
경상도
전라도
충청
강원제주
90.5%
90.3%
90.6%
92.2%
87.7%
사회계층
하층
중간층
상층
90.7%
90.4%
86.1%
11.8%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
90.2%
90.6%
91.8%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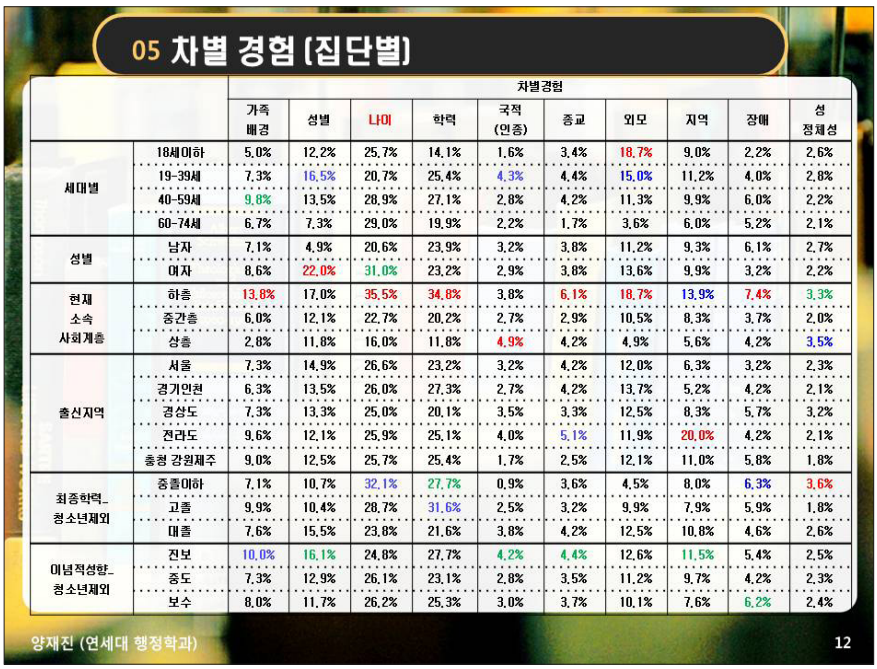
< 15 >


05 사회적 성공 요인 인식 (성별)
세대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30.3%
41.6%
28.1%
35.7%
47.1%
17.1%
35.7%
50.3%
14.1%
34.6%
50.0%
15.4%
중요하지않음 보통 중요함
성별
남자
여자
29.9%
49.5%
20.5%
39.7%
46.4%
14.0%
이념적 성향
진보
중도
보수
38.4%
45.2%
16.4%
33.2%
52.5%
14.3%
35.8%
48.1%
16.1%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2

<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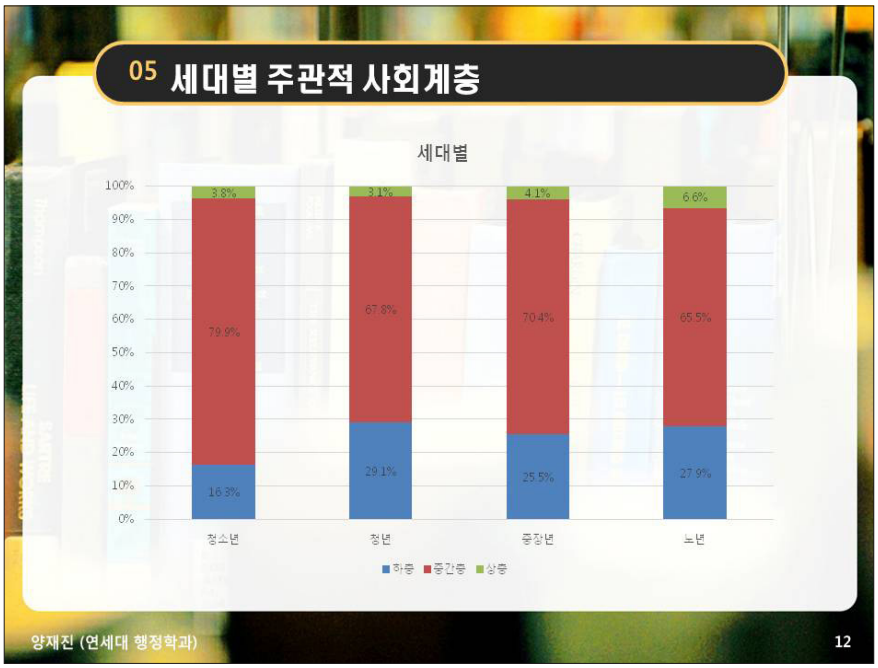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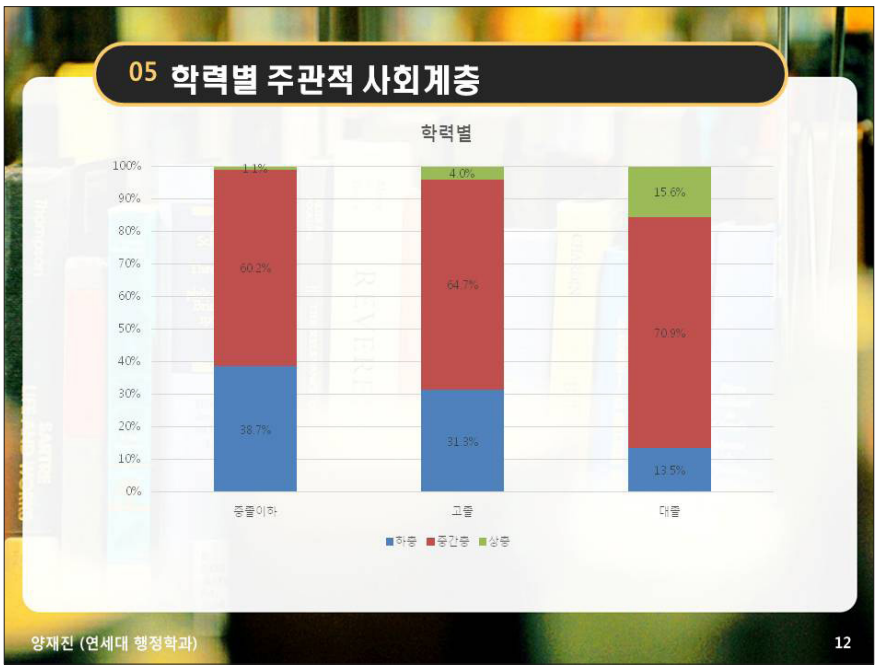


		차별경험									
		가족 배경	성별	나이	학력	국적 (민증)	종교	외모	지역	장애	성 정체성
세대별	18세이하	5.0%	12.2%	25.7%	14.1%	1.6%	3.4%	18.7%	9.0%	2.2%	2.6%
	19-39세	7.3%	16.5%	20.7%	25.4%	4.3%	4.4%	15.0%	11.2%	4.0%	2.8%
	40-59세	9.8%	13.5%	28.9%	27.1%	2.8%	4.2%	11.3%	9.9%	6.0%	2.2%
	60-74세	6.7%	7.3%	29.0%	19.9%	2.2%	1.7%	3.6%	6.0%	5.2%	2.1%
성별	남자	7.1%	4.9%	20.6%	23.9%	3.2%	3.8%	11.2%	9.3%	6.1%	2.7%
	여자	8.6%	22.0%	31.0%	23.2%	2.9%	3.8%	13.6%	9.9%	3.2%	2.2%
현재 소속 사회계층	하층	13.8%	17.0%	35.5%	34.8%	3.8%	6.1%	18.7%	13.9%	7.4%	3.3%
	중간층	6.0%	12.1%	22.7%	20.2%	2.7%	2.9%	10.5%	8.3%	3.7%	2.0%
	상층	2.8%	11.8%	16.0%	11.8%	4.9%	4.2%	4.9%	5.6%	4.2%	3.5%
출신지역	서울	7.3%	14.9%	26.6%	23.2%	3.2%	4.2%	12.0%	6.3%	3.2%	2.3%
	경기인천	6.3%	13.5%	26.0%	27.3%	2.7%	4.2%	13.7%	5.2%	4.2%	2.1%
	경상도	7.3%	13.3%	25.0%	20.1%	3.5%	3.3%	12.5%	8.3%	5.7%	3.2%
	전라도	9.6%	12.1%	25.9%	25.1%	4.0%	5.1%	11.9%	20.0%	4.2%	2.1%
	충청 강원제주	9.0%	12.5%	25.7%	25.4%	1.7%	2.5%	12.1%	11.0%	5.8%	1.8%
최종학력_ 청소년제외	중졸이하	7.1%	10.7%	32.1%	27.7%	0.9%	3.6%	4.5%	8.0%	6.3%	3.6%
	고졸	9.9%	10.4%	28.7%	31.6%	2.5%	3.2%	9.9%	7.9%	5.9%	1.8%
	대졸	7.6%	15.5%	23.8%	21.6%	3.8%	4.2%	12.5%	10.8%	4.6%	2.6%
이념적성향_ 청소년제외	진보	10.0%	16.1%	24.8%	27.7%	4.2%	4.4%	12.6%	11.5%	5.4%	2.5%
	중도	7.3%	12.9%	26.1%	23.1%	2.8%	3.5%	11.2%	9.7%	4.2%	2.3%
	보수	8.0%	11.7%	26.2%	25.3%	3.0%	3.7%	10.1%	7.6%	6.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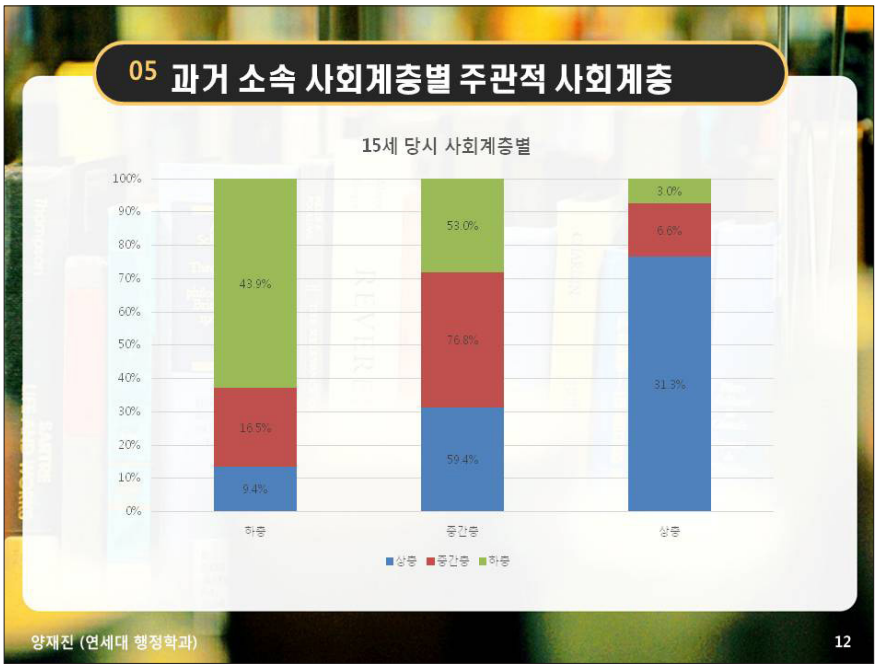
< 18 >


05 세대별 주관적 사회계층
세대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8%
79.9%
16.3%
3.1%
67.8%
29.1%
4.1%
70.4%
25.5%
6.6%
65.5%
27.9%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하층 중간층 상층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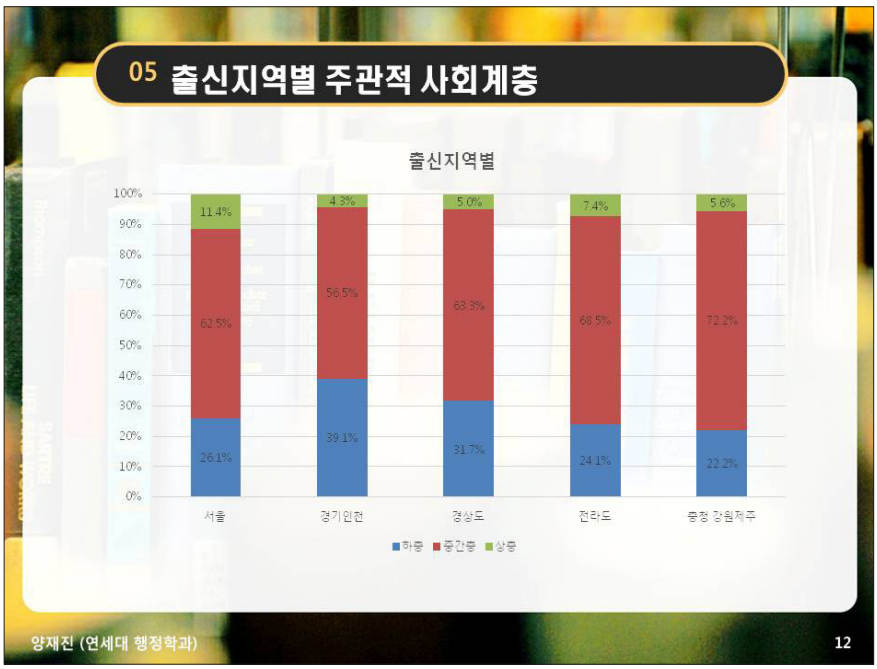
< 19 >


05 학력별 주관적 사회계층
학력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1%
60.2%
38.7%
4.0%
64.7%
31.3%
15.6%
70.9%
13.5%
중졸이하
고졸
대졸
하층 중간층 상층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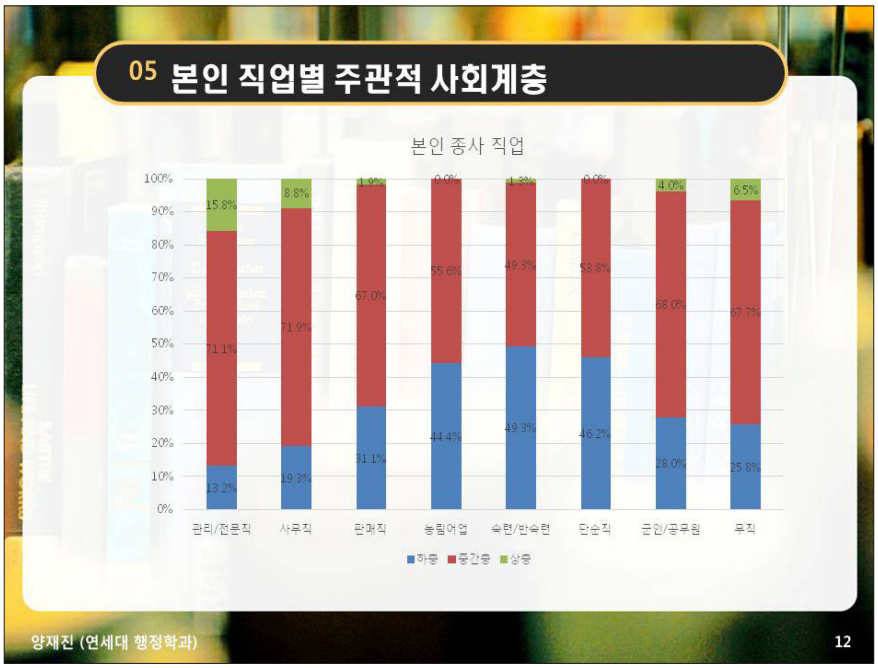
< 20 >


05 과거 소속 사회계층별 주관적 사회계층
15세 당시 사회계층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43.9%
16.5%
9.4%
53.0%
76.8%
59.4%
3.0%
6.6%
31.3%
하층
중간층
상층
상층 중간층 하층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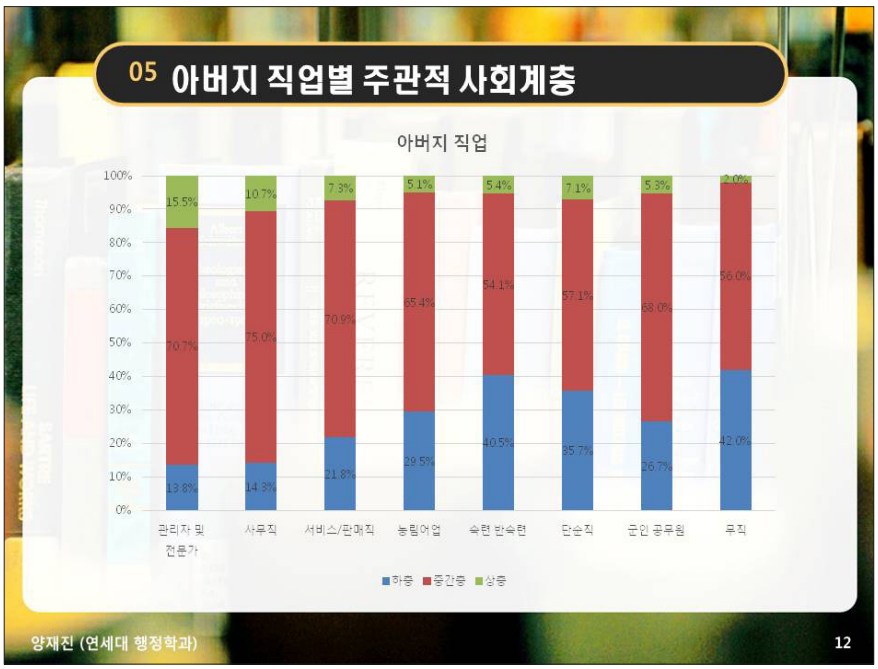
< 21 >


05 출신지역별 주관적 사회계층
출신지역별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1.4%
62.5%
26.1%
4.3%
56.5%
39.1%
5.0%
63.3%
31.7%
7.4%
68.5%
24.1%
5.6%
72.2%
22.2%
서울
경기인천
경상도
전라도
충청 강원제주
하층 중간층 상층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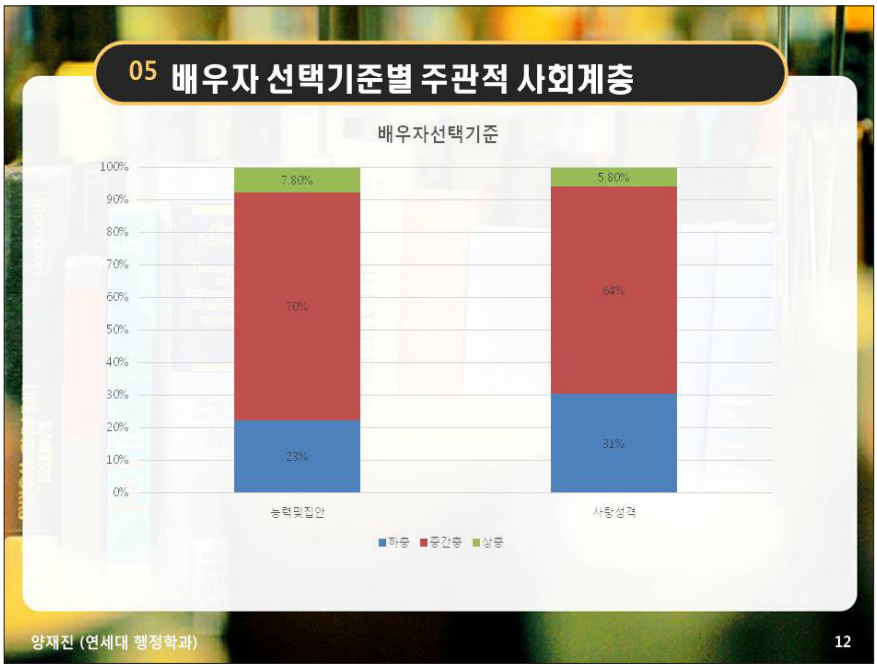
< 22 >


05 본인 직업별 주관적 사회계층
본인 종사 직업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5.8%
8.8%
1.9%
0.0%
1.3%
0.0%
4.0%
6.5%
71.1%
71.9%
67.0%
55.6%
49.3%
53.8%
68.0%
67.7%
13.2%
19.3%
31.1%
44.4%
49.3%
46.2%
28.0%
25.8%
관리/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반숙련
단순직
군인/공무원
무직
하층
중간층
상층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2

< 23 >


05 아버지 직업별 주관적 사회계층
아버지 직업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5.5%
10.7%
7.3%
5.1%
5.4%
7.1%
5.3%
2.0%
70.7%
75.0%
70.9%
65.4%
54.1%
57.1%
68.0%
56.0%
13.8%
14.3%
21.8%
29.5%
40.5%
35.7%
26.7%
42.0%
관리자 및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숙련 반숙련
단순직
군인 공무원
무직
하층
중간층
상층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2

< 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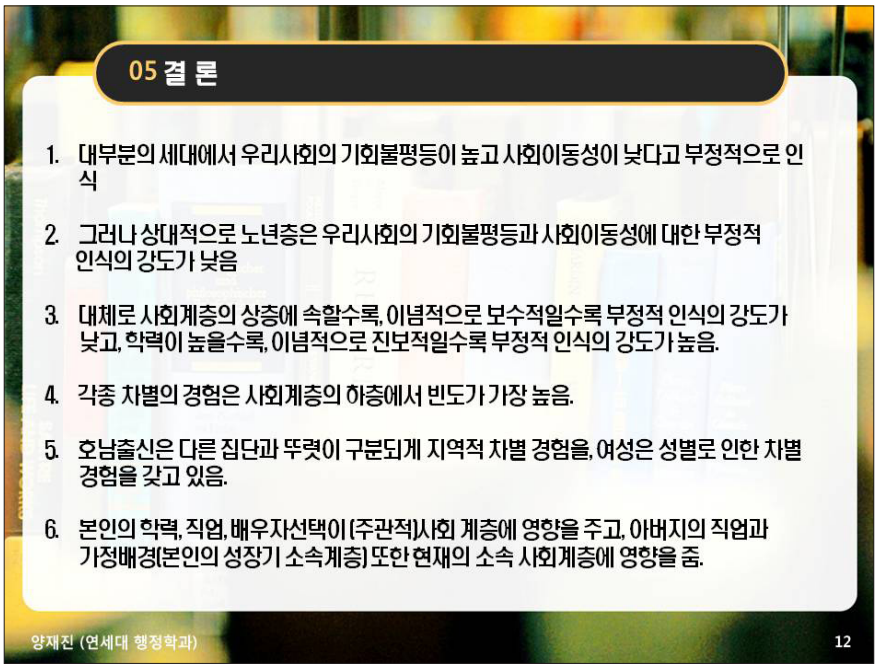


< 25 >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957	,181		10,808	,000		
과거소속계층	,330	,035	,350	9,296	,000	,862	1,160
학력	,417	,157	,101	2,659	,008	,844	1,185
가계소득	,082	,016	,205	5,304	,000	,817	1,223
공적연금액	,250	,041	,233	6,147	,000	,851	1,175
문화예술활동	,115	,035	,120	3,275	,001	,914	1,094
배우자선택기준 (능력/집안)	,330	,148	,078	2,231	,026	,991	1,009
호남출신	,042	,160	,009	,262	,794	,994	1,006

< 26 >


05 결 론
1. 대부분의 세대에서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이 높고 사회이동성이 낮다고 부정적으로 인식
2.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년층은 우리사회의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강도가 낮음
3. 대체로 사회계층의 상층에 속할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부정적 인식의 강도가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부정적 인식의 강도가 높음.
4. 각종 차별의 경험은 사회계층의 하층에서 빈도가 가장 높음.
5. 호남출신은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게 지역적 차별 경험을, 여성은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을 갖고 있음.
6. 본인의 학력, 직업, 배우자선택이 (주관적)사회 계층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의 직업과 가정배경(본인의 성장기 소속계층) 또한 현재의 소속 사회계층에 영향을 줌.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12

< 27 >


감사합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 28 >

종합토론문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 사회통합실장)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진경호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토론문 1

“계층갈등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와 관련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 사회통합실장

본 발표는 한국 사회의 계층갈등에 대한 논의를 특별히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부조화라는 측면에서부터 논의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토론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계층갈등”이라고 흔히 말할 때 이 갈등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인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그것인데, 사실 발표자가 첫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계층 인식의 부조화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구성원 각 개인이 스스로와 겪고 있는 갈등, 혹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사회에 대해 느끼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층갈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염두에 두는 것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발표자의 논의의 시작은 매우 흥미롭지만 뭔가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이다. 다만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사회에 전반적인 불신의 분위기를 불러오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시각, 즉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는 발표자의 의견에는 적극 동의한다.

한편으로 이 논의를 조금 생각해 보면, 계층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에 주관적인 인식을 도입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3] 계층인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4년 이후 갑자기 중간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이례적으로 상승하

고 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로운데, 이는 주관적 계층의식이란 엄밀한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계층에의 소속감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상대적 지표'들이 그러한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문을 통해 주관적 계층인식이라는 지표가 의미없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관적인 인식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그 해석에 생각보다 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도 실제로 '중산층'에 속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불일치는 많이 언급되고는 했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계층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에 대한 계층 간 인식 차이를 보여 주는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서 매우 흥미로웠던 점은 소득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계층을 막론하고 언제나 다른 분야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불평등한 방향으로 높다는 사실이었다. 주관적 계층이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3.41점으로 불평등이 평균보다는 훨씬 심하다는 인식을 보인다는 점과 모든 계층에 있어 소득재산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 보면 토론자는 이 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결과의 불평등이 상당 수준 고정되어 있는 사회라는 생각을 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발견은 교육기회-취업기회-승진기회-소득재산 순으로 소득재산을 결정짓는, 따라서 계층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소득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될수록 불평등하다고 인식된다는 점이었다. 이 점을 조금 상술해 보면 소득재산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소득재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경로가 바로 취업인 것이다. 이때 교육기회의 평등에 비해 취업기회가 훨씬 불평등하게 인식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이 소득재산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로 중 하나가

승진일 것인데, 이에 대한 불평등 인식은 취업기회보다 높다는 점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교육–취업–승진–소득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점점 더 불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은 결국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경로가 점점 더 고착화되어 간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해석이 '3. 구조적 환경의 변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객관적 자료의 분석에 의해서 뒷받침된다는 사실은 앞에서 토론자 본인이 지적했던 것과 다르게 주관적 인식이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끝으로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발표자의 '노동시장의 하위계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싶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의 50~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 조합해 보아도 노동시장의 결과는 지극히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고용 자체가 이전에 비해 훨씬 불안정해져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결국 노동시장 내부에서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단순히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삶의 안정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이들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지원, 특별히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는 한 이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는 사회 전반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최근의 '수저' 논의는 결국 이러한 불만의 극적인 표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위로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토론문 2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과제”와 관련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 요약

□ 우리나라 세대 간 소득이동성이 약해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부모의 소득수준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경제 고도성장기를 지나고 저성장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다시 높아지고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부동성(social immobility)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들을 대상으로 한 Great Gatsby Curve는 우상향

– 이 같은 추세는 1980년대에 비해 더욱 뚜렷해짐

–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사회이동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대물림이 지속되면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은 더욱 어려워짐

– 사회경제적 배경과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과의 관련성이 높아짐

• 유전적으로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교육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 상대적으로 지능이 열위에 있는 아동에 비해 인지능력이 뒤지게 됨

□ 발표자께서는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중심 일자

리 공급, 재분배와 복지, 세습이 아닌 이동을 위한 교육, 사회적 배제와 차별예방을 제시함

2. 계층이동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문제

□ 정책 수립을 위한 양극화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실을 구분할 필요성

– 소득(및 부)의 양극화는 분포가 특정 수준을 중심으로 양 극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의미

– 소득 불평등도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로 측정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로 본 소득불평도를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악화되다가 이후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지니계수: 전국가구, 가처분소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306	0.312	0.314	0.314	0.31	0.311	0.307	0.302	0.302	0.29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그런데 지니계수는 동일할지라도 소득격차는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동일한 성장률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소득분포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 따라서 적절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작금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소득불평등인지 소득계층 간의 격차 확대로 인한 것인지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

□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교육을 매개로 한 계층이동성의 제약요인 외

에 지대추구(rent-seeking)에 따른 제도적 요인이 작용함을 설명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한 지대추구활동은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킴

- 특권이나 특혜를 얻기 위해 뇌물, 로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대추구비용은 생산적 경제활동으로 투입되지 못한 기회비용의 손실로 볼 수 있음
- 최승노(2015)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권추구지수는 (분석 대상 국가) 134개국 중 45위를 차지
  - 대체로 북유럽 국가와 선진국들은 특권추구가 덜하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 특권추구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대추구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부조리가 발생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15년 16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37위를 차지
  - 이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속함
-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간소득함정에 빠져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지대추구의 유인이 있는 특수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이 다양한 규제를 통해 진입장벽, 불공정 경쟁, 시장기능 왜곡, 사회질서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킴

- 각종 인허가 및 자격제도를 통한 진입장벽 및 인위적 독과점 구조로 인한 지대 형성
- 자유로운 수출입 등 무역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대

3.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발제자께서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해 제시하신 방안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동의하므로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함

–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사업의 출현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 시장규제가 독점적 지대를 형성 가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세대와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률 제고

– 사회이동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 교육이 선별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본적 학습능력을 제고시키는 기능 강화

• 보편적 공교육의 수준을 높여 저소득층도 양질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 다만, 재분배와 복지에 관해서는 근로유인을 악화시키지 않는 생산적 복지제도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성

• 자칫 정부보조가 근로가능한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사회적 배제와 차별 예방을 위하여 부패와 부조리의 근인을 제거하고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성

□ 이를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지대추구유인을 최소화해야 함

– 지대추구활동의 유인이 되는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

– 공공 부문의 정보공개 확대

– 정치인과 정부관료의 타협과 재량보다는 헌법에 입각한 준칙을 우선시할 필요

토론문 3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문제의 제기

○ 한국은 식민지 경험과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국민이 가진 것 없이 출발하였음

– 한국인의 평등의식은 오랜 역사의 산물은 아니지만 커다란 공감대를 지니고 있음

○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한국인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의 향상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증대시켰음

–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 세대 내에 교육 및 소득 수준 향상을 통해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달성

○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사회적 이동성은 고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장잠재력의 둔화와 양질의 일자리 공급 능력 저하는 사회적 이동성을 제약

○ 과거에는 고등교육만 받으면 중산층으로의 신분 이동이 자연스럽게 가능했지만 점차 교육의 신분 상승의 사다리 기능이 약화

– 고등교육을 통한 중산층 진입의 어려움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미국을 위시한 많은 선진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남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수의 고학력자는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이 어려워졌음

○ 사회적 이동성 저하는 소득불평등 현상과 맞물리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

– 최근 헬조선, 흙수저 등 논란이 이런 단면을 보여 줌

○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문제의 해결과 성장잠재력 증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함

– 소득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선진화 방안 내에서 모색되어야 함

–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과 사회적 이동성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

□ 나아가야 할 방향

〈성장잠재력과 사회적 이동성〉

		성장잠재력		
		상	중	하
사회적 이동성	상	1	2	3
	중	4	5	6
	하	7	8	9

○ 정책 우선순위의 설정

– 성장잠재력과 사회적 이동성을 동시에 높이는 1, 2, 4, 5 중심의 정책

○ 1을 지향하는 정책의 도입을 적극 검토

– 여성 및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경쟁 도입 및 시장 개방)

–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통해 노동시장 2중구조 개선

○ 반면 9에 가까운 정책은 지양

– 재정 지출을 통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책
– 무차별적 반값 등록금
– 경제 관련 다양한 규제 및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자격증 제도 포함)
– 과도한 노동시장의 규제(EPL 포함)

○ 영국 Cameron 수상의 Lifes Chances 접근 방식이 필요
– 20세기 방식의 시장과 정부 개입의 단순 논리를 극복
– 시장의 lifting boat vs. 정부 주도하에 온정주의적 재정지출
– 공동체 지향적이면서 사람들의 일생을 놓고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접근
– 유년기: 가정 중심 양육
– 청년기: 학교 교육의 강화 및 공동체 의식의 회복
– 장년기: 질병 퇴치 통한 사회 복귀

○ 결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
– 성장잠재력과 선순환 하는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 성장 동력을 복원하면서 사회적 이동성을 예방적,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

토론문 4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 장기적인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평균 수명 연장, 100세 시대→ 세대 간 일자리 경쟁→ '孝' 문화가 무너짐 → 사회 불만, 사회 문제, 사회갈등 초래, 사회통합 저해

○ 국민통합 수준은 높지 않고 사회갈등은 높다. 갈등의 심각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67.1%가 높다(2015 국민대통합위원회 백서)

• 갈등유형별 심각성 : 계층갈등 〉 노사갈등 〉 이념갈등 〉 지역갈등 〉 세대갈등 순

○ 우리나라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 관리역량은 하위권

□ 갈등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GDP의 27%,소모비용은 1인당 연 900만 원, 매년 82조~246조 원 낭비

○ 계층갈등–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 고착화

○ 청년실업률– 계층 간 갈등과 세대 간 갈등

– 2016년 5월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9.7%. 청년실업 인구는 43만 명(체감실업률은 34%)

–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신조어: 빨대족, 돌취생, 7포,

워킹푸어, 허니문푸어, 베이비푸어, 헬조선

○ 저출산 고령화

–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Shortage: 노동력 부족, Shrinkage: 생산성 저하, Struggle: 세대 간 일자리 경합)

–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비 증가, 국민연금 기피 현상, 사회적·세대 간 갈등은 심화

□ 관리역량

○ 불공정성

–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느냐는 설문조사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51.5%,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정한 경쟁이 아닌 편법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0.5%로 답변(국민대통합위원회 2015년 백서), 모두 과반

○ 불평등–최상위 소득 계층 1%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67%,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CEO 평균보수가 40배에 달하는 수준, 저임금노동자들이 존재 한국 25%(OECD 평균은 16%)

– 금수저, 흙수저 – '갑'과 '을', 갑질

○ 법의 집행 불평등지수가 높음(유전무죄 무전유죄)

□ 갈등해소와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제언

○ 소통강화

○ 공정성, 평등 강화– 만인은 법 앞에 평등

○ 청년실업률 제고– 임금피크제 확산, 기성세대의 양보

○ 배려, 솔선수범, 희생, 역지사지

– 사회지도층: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 기업인: 윤리/준법 경영,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강화
– 정부: 투명성, 부정부패, 복지부동, 협업,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 효율성 강화
– 언론: 갈등조장, 좌고우면, 선동적, 선정성을 지양하고 정론직필
– 정치인, 국회의원: 국회의원 200여 가지 특권 내려놓기, 정치인–당리당략

■ 개천에서 용 나고, 쨍하고 해 뜰 날, 희망 사다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이런 토론회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토론문 5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 인식, 현황, 그리고 과제”와 관련

진경호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겸 사회부장

양재진 교수의 인식조사를 통해 귀결된 결론은 그동안 이뤄져 왔던 유사 인식조사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인다.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청년층(세대별)과 진보진영(이념별), 소득하위층(계층별), 호남(지역별)에서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호남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지역차별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여성의 성적 차별 경험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 또한 통계수치를 넘어 진작 우리 사회가 목도해 온 대목이다.

양 교수의 조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사회적 성공요인과 관련한 세대별 인식조사 결과로 보인다. 양 교수는 설문에서 ‘부모 경제력’과 ‘본인의 노력과 열정’ ‘인맥’ ‘성별’ 등 모두 네 가지의 요소를 제시하며 의견을 물었다.

결과를 보며 새삼 놀랍다고 느낀 점은 ‘본인의 노력과 열정’보다 ‘부모 경제력’이나 ‘인맥’을 사회적 성공 요소로 꼽은 응답이 노인 세대를 제외하고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에서 모두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적 경험이 일천하고 협소한 15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즉 중·고등학

생들조차 '인맥'을 중시하는 비율이 '본인의 노력과 열정'을 중요하다고 보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대단히 유의미하며 우려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겠으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학습과, 어른들의 태도와 언행 등을 통해 얻은 간접 경험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조차 이 사회가 자신의 능력보다는 학연과 지연, 혈연,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해 쌓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성공 여부가 갈린다고 인식하게 됐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이같은 청소년의 인식은 지금의 흙수저-금수저 논란과 맞물려 향후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뜻한다고 하겠다. 양 교수의 조사에서 보듯 '소득'과 '기회'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어느 세대든 가릴 것 없이 높은 상황에서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마저 사회적 성공 수단으로 자신의 노력보다 인맥을 더 중시한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양 교수의 조사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부모의 경제력이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는 일견 청소년 세대의 상대적 건강성을 말해 주는 지표로 읽힌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5년, 10년 뒤에도 같은 인식을 견지할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적 성공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낮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반감과 반발은 기성세대보다 한층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을 증폭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여유진·정해식 등)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이른바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거쳐 정보화세대로 넘어오면서 직업지위와 계층의 고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5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득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을 면접조사했다.

먼저 아버지 학력과 본인 학력의 교차분석 결과 대체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학력도 높았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이면 본인의 학력도 중졸 이하인 비율이 16.4%에 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상이면서 본인 학력이 중졸 이하인 비율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다. 세대 간 고학력 세습도 어느 정도 발견됐다. 즉 아버지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면 아들도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인 비율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대에서 각각 64.0%, 79.7%, 89.6%였다. 최근 세대로 올수록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다.

아버지의 직업(단순노무직, 숙련기능직, 서비스판매직, 사무직, 관리전문직)과 아들 직업 간 교차분석을 해 보니,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면 아들의 직업도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42.9%로 평균(19.8%)의 2배가 넘었다.

세대별로는 관리전문직 아버지를 둔 아들이 관리전문직인 비율이 민주화세대에서는 56.4%로 평균(23.3%)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정보화세대에서는 37.1%로 역시 평균(18.2%)의 2배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정보화세대에서는 단순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단순노무직인 비율이 9.4%로 평균(1.9%)의 약 5배에 달해 특히 정보화세대에서 직업의 세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15세 무렵 본인의 주관적 계층(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과 현재 주관적 계층 간의 교차분석 결과, 아버지 세대의 계층과 무관하게 자식 세대가 하층 또는 중상층이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계층에 따라 아들이 특정 계층에 속할 확률을 살펴보니 정보화세대에서 특히 아버지가 중상층 이상일 때 자식 또한 중상층 이상에 속할 확률은 아버지가 하층이었던 경우 자식이 중상층 이상이 될

확률보다 거의 무한대로 더 높았다. 즉, 정보화세대에서 중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 고착화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일정 이상의 상향 이동은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공동조사한 청년 · 부모세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갈등 구조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부모의 역할, 선호하는 직업 등에 있어서 약간의 인식 차이는 존재했으나 이를 갈등으로까지 규정할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보고서에 담긴 학력과 직업의 계층 간 경직성을 바탕으로 양 교수의 조사에서 드러난 청소년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 확장돼 나갈 것인지를 예측해 본다면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심화되는 계층 갈등에 세대 갈등이 얹어지면서 자칫 계층세대 복합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얼마 전 강연에서 "계층과 신분이 대물림되고, 능력주의가 파괴되며, 부패·불공정이 만연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오늘의 현실에 대해 마치 남의 탓인 양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게 온당한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나 그의 개탄만큼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하다.

사회이동성 확대,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해법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돼 있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는 기초적 기회평등 정책은 마땅히 강화되고 지속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학연, 지연, 혈연과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인맥에 의한 끼리끼리 문화 구조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계층 갈등을 줄이고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는 일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유능하고 전도유망했던 검찰 엘리트가 하루아침에 재하청 로비스트로 전락하며 전관예우의 구조적 병폐를 온몸으로 내보이는 현실이 극복되지 않는 한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불행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 논쟁 – 기회의 수저는 없나?

– 행복세상 2016 제2회 국가발전 정책토론회 –

2016년 6월 24일

발행인 김성호
펴낸곳 재단법인 행복세상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9, 부림빌딩 6층
전화 02-558-0001
팩스 02-558-7676
홈페이지 www.ihappyworld.ne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hehappyworldfoundation

본 정책토론회는 행정자치부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보조금 및 재단 기금으로 운영되며, 올해 총 4회의 토론회를 마치고 그 내용을 모두 담은 「2016 국가발전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를 연말에 발간,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 논쟁
-기회의 수저는 없나?



* 본 자료집은 행정자치부의 201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 보조금 및 재단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